



성과연봉제는 노동조건과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뿐

공공·금융 노동자 파업을 환영한다

북한 홍수 피해와
핵실험

2~3 면

1980년대 이후 선두에
섰던 브라질·남아공
노동운동, 기로에 서다

10, 11 면

스페인 포데모스와
민중주의

12~13 면

기업 성차별의 실태와
그에 맞선 투쟁

6~7 면

서평 《중국 혁명의 비극》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에
관한 최상의 역사책

15 면

서평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
새 세대 페미니즘의
강점과 약점

14 면



누구의 딸일까요?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은 것이
냐?”
“남편이 (다시 일하러) 나가라고
하느냐?”
“친정엄마는 다시 일한다고 하겠
다니까 뭐라고 하느냐?”
“(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려대 사범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던져진 질문들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
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
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다. 마음 편하게 계
시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속 뒤집어 놓는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특히 여자들이 정신이 나갔다.
군대를 안 갔다가 와서 그런가 …
전부 술집 하고 다방 하고 그런 것
들이다.”

성주군수 김항곤의 정신 나간
사드 배치 찬성

“[민중총궐기] 집회 집행부로부터
사과 표명 받았느냐?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은 사과하지 않고
이것을 막았다가 약간의 실수로
사고를 낸 경찰에게만 유감 표명
하라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중,
약간의 실수로 의식 불명이라니?

“기회가 된다면, 시민의 일원으로
서 북한과의 화해 증진을 돕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반기문,
임기 중에는 “유감”만 표명하더니?

“39%”
전체 조세감면 중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2012년 25%였는데
역시 대기업이 행복한 나라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영국 노동당 당대표 재선거:
동학과 전망
-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정부에 맞서, 더민주·국민의당과
독립적으로 운동은 계속돼야
- ★ 이화여대 총장 퇴진 운동의 의미
되짚기 ①
최경희 총장은 사퇴하고,
프라임·코어 사업 중단하라
- ★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 관련 재판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물자마 기소’가
탄로나다
- ★ 서평 (정치적 각성)
낯설지만 흥미롭고 다채로운
비판적 교양 서적
- ★ 영화평 〈브링 홈: 아버지의 땅〉
중국 제국주의가 유린한
티베트라는 땅



서지현/최재호 제공

홍수로 집을 잃고 망연자실한 북한 주민.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김영익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대가 홍수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
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것 같다. 북한
인민대중의 고통이 더 가중되지 않았
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 8월 말 태풍 라이언룩이 북상
하면서 두만강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
렸고, 두만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다.
1백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였다고 한
다.

그래서 무산, 회령 등 함경북도 주요
지역이 모두 홍수 피해를 입었다. 북한
당국도 ‘해방 이후 최악의 재앙’이라며
피해가 심각함을 인정하고 국제적 지
원을 요청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유엔
인도 지원 기구들이 작성한 ‘함경북도
홍수 피해 공동 보고서’를 보면, 인명
피해는 사망·실종을 포함해 무려 5백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고 주민 수십
만 명이 이재민이 됐다. 해령시 강안동
처럼 마을 전체가 “온전한 건물이 한
채도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된” 곳도 있
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은 적어도 북
한 주민 14만 명에게 긴급 구호가 필요
하다고 보고했다.

물인정

홍수로 피해를 입은 건 북한의 평범
한 주민들이다.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면, 집과 생필품을 잃어버린 함경
북도 주민들은 질병·식량난·추위 등
으로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인
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물인정한 우익 박근혜 정부
는 인도적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 통
일부는 인도적 지원과 북핵 문제를 연
계해, 사실상 수해 지원에 나서지 않
을 것임을 못 박았다.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 “인
도적 지원” 조항이 있음에도 통일부는
이번 홍수 피해가 북한인권법의 “인도
적 지원” 조항과 관계없다고 우기고
있다.

정부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민간
인의 대북 접촉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
에, 남한 민간 단체들의 대북 지원도
여의치 않다.

박근혜 정부가 이토록 대북 인도적
지원에 인색한 것은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서다. 박근혜가 마치 북한 정권과 주
민을 분리해 자신이 북한 주민을 돌볼 것
처럼 말해 온 것이 완전한 위선임을 드러낸
것이다. 남쪽에서는 쌀 풍년으로 쌀값이 폭
락하는데도 북한에 어떤 구호 식량도 보내
지 않겠다고 냉혹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도 우파적인 상호주의
의 입장에서 인도적 지원을 반대한다.
“북한 당국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지
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안철수의
대북관도 박근혜 정부 못지 않게 우파
적이다.

그러나 제재 강화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
지도 못할뿐더러,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
의 고통만 가중시킨다.

2013년 미국이 북한의 조선무역은
행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선정하자, 이
에 압력을 받은 중국은행들이 조선무
역은행과의 거래를 끊었다. 그러자 북
한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단체와 유

엔 기구들이 북한 현지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송금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
어야 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
근혜 정부는 민간 단체가 북한에 보내
려 한 결핵 치료약의 반출 승인을 제때
해주지 않아 북한 결핵 환자 1천5백 명
이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다. 정부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뒤늦게 반출을
승인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례 외
에도 제재 강화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유형무형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
다.

지금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에게 필
요한 것은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조건 없는 대
북 인도적 지원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리고 대북 제재 조치를 모두 철회해
야 한다.

북한 지배 관료에게 인민의 안전은 뒷전이다

북한에서 홍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
는 심각한 재해이다. 특히, 1995년과
1996년 홍수는 북한 경제 위기와 겹쳐
엄청난 재앙이 됐다. 그 뒤로도 북한에
서는 주민들이 홍수로 계속 큰 피해를
입었다.

북한은 핵실험을 여러 번 할 능력이
있는 중간 규모의 공업 국가이다. 그
런데도 북한은 주기적인 홍수 피해를
예방할 사회기반시설을 수십 년째 제
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핵무기와
달리, 홍수 예방 같은 인민의 안전은

북한 지배 관료에게 투자의 우선 순위
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인
민 중시”를 내세운 게 얼마나 모순적
인지가 드러난다. 김정일이 추진해 온
‘경제와 핵무기 병진 노선’의 모순도
보여 준다.

성과연봉제 저지 금융·공공부문 노조 파업 집회 주요 일정

금융노조 총파업

일시: 9월 23일 10시 30분
장소: 상암월드컵경기장

철도·건강보험공단노조 수도권 총파업 출정식

일시: 9월 27일 14시
장소: 서울역
(그 외 각 사업장에서 출정식)

성과퇴출제 저지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1차 총파업 대회

일시: 9월 28일
장소: 전국 13개 지역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대회

일시: 9월 29일 15시
장소: 여의도 광장

지역 연대투쟁의 날

일시·장소: 9월 30일
(지역별 일정 참고)

성과퇴출제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범국민대회

일시: 10월 1일 15시
장소: 대학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김영익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날인 9월 10일, 박근혜는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의 발언은 7개월 전 그 자신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해 말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때도 박근혜는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돈줄을 더한층 옥죄려는 미국의 전술에 호응해 개성공단을 닫아 버렸다.

대북 경제제재 강화는 군사적 압박 증대와 결합됐다. 미군은 B-52 전략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등을 잇달아 한반도에 투입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대북 선제 공격 계획을 반영한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김정은은 제거가 목적인 ‘참수작전’ 훈련까지 실시했다.

그 절정이 바로 사드 배치 결정이었다. 북한 핵 ‘위협’을 핑계로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라는 숙원을 이룬 것이다.

올해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등을 잇달아 단행한 배경이다.

악순환

그러나 대북 경제제재 수위를 높이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한·미의 “기존 방식”은 이번 북한 5차 핵실험에서 드러나듯, 실패한 정책이다. 미국과 남한 정부가 기존의 대북 강경책을 고수·강화하면 북한은 더더욱 핵과 미사일 전력 강화에 매달릴 것이다. 경제제재 강화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과거 경험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그동안 ‘선 [북한] 비핵화, 후 대화’를 내세운 미국과 남한의 대북 강경 정책이 한반도에서 위험을 키우며 악순환을 일으켰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이 취한 조치들은 4차 핵실험 이후의 일들과 다를 바 없다. 9월 13일 미군은 B-1B 초음속 폭격기를 수도권 상공에 투입했다. 한국의 국방부는 ‘참수작전’과 유사한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공개했다.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가 있는 곳을 “미사일 등 정밀타격부터 특수부대 투입 등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에서는 새 대북 제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9월 18일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은 “도발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북한에] 가하겠다”며 유엔 제재 외에 독자 제재 강화를 공언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 ‘위협’을 실제보다 과장한다. 물론 북한도 협상력을 높이려고 자국의 군사력에 대해 허세를 부린다.



핵실험 후 미군이 수도권에 전개한 B-1B 폭격기. 이런 무력시위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자극한다.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서 발 빠는 안철수와 추미애

9월 10일 박근혜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라]”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도 공격했다. 그리고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불순(외부)세력’이라는 것이다. 이런 발언에는 북한 핵실험을 이용해 김천·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현지에 억제해 두고 고립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문제에서 연일 후퇴하고 있다. 더민주당 신임 대표 추미애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정작 당선된 후에는 ‘토론 후 결정할 것’이라며 당론 채택을 기약 없이 미뤄 버렸다.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이라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지다. 핵실험 이후 안철수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박지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를 보면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에서 후퇴하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같다.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한미동맹의 지속을 원하는 한국 지배계급 다수의 입장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 같은 쟁점에 직면해 동요하다가 결국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에 타협해 왔다. 두 당의 주요 지도자들은 모두 과거에 전략적 유연성, 팽택 미군기지 확장 등의 미국 제국주의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지지자들의 바람을 배신한 바 있다.

북한 핵실험 후, 이번에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자들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관련국들의 과장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타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화성-10 미사일은 이제 한 번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그전까지는 발사에 연거푸 실패했다. 20퍼센트도 안 되는 성공률만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말하는 것은 속단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실전 배치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5~10년 내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도 미국 정부와 소위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완성 시점으로 “5~10년 내”를 거론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핵탄두의 파괴력을 향상시키고 투발수단을 개발해 나가려 더한층 애쓸 것이다. 이

것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당장 남한만 해도 북한 국민총소득(GNI)보다 더 많은 돈을 국방비에 쓴다.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 배치에 이른다고 해도 꺾이지 등 서태평양 연안 지역의 미군 핵 전력만으로도 능히 북한 핵무기 전력을 압도하고도 남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의 군비 경쟁 양상만 서로 견줘 봐도 북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불안정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매우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관료들의 군비 투자를 이번 함경북도 홍수 피해에 대한 매우 취약한 대처 능력과 비교해 보면, 북한 체제의 우선순위가 “인민”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 등과의 군사적 경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와 하등 관계없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누적되는 위험

사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시험이나 남·북한 간 국지적 충돌 같은 긴장을 이용해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동맹 형성과 군사력 강화 등—을 추구해 왔다. 전략 목표는 중국 견제다.

이번에도 오바마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사드의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9월 10일 일본 방위상 이나다 도모미는 한국의 국방장관 한민구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촉구했다. 그리고 19일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도 외무장관 윤병세를 만나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윤병세는 “그 필요성에 완전히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당연히 중국 등 주변국은 크게 반발할 것이다.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박근혜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배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알팍한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내놔다. 하지만 시진핑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데다가, 이란 핵 합의 이후에도 중동과 유럽에서 러시아를 둘러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가 그대로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 미국과 한국 정부가 취할 조치들은 모두 한반도와 그 주변에 위험을 더한층 누적시킬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 강행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의 차원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동유럽 MD 배치를 놓고 벌어진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조지아 전쟁과 크림반도 사태로까지 번졌다.

중국이 미국·일본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국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중국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일부인 제국주의 국가로, 한쪽이 아닌 소수 인종은 물론 한쪽 내의 노동자·농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국가이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뒤흔든다’는 것은 허풍에 가깝다. 핵과 미사일이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데 그토록 중요한 수단이라면 옛 소련은 왜 붕괴했을까?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으로 미국과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한반도 민중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군비를 늘리고 동맹을 강화하는 명분이 됐을 뿐이다.

한편 북한 핵 ‘위협’에 관한 과장된 인식을 똑같이 받아들이며, 이번엔 공평무사한 양비론(사드 배치 반대, 북한 핵실험 규탄’ 같은 슬로건)으로 나아가는 것도 반전·평화 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국제주의 원칙을 지킬 때만 효과적인 반전·반제국주의 운동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

철도 민영화는 ‘사고철 악몽’을 부를 것

지난 7월 국토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신설될 36개 노선 중 14개 노선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단지 선로 건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자는 선로를 건설한 뒤 철도공사에 빌려 주고 선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직접 열차를 운행할 수도 있다. 신설 구간을 기존 철도와 연결하면 기존 노선에서도 철도공사와 경쟁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7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김광림과 더민주당 의원 송기현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민자철도를 더 확대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여러 철도 기업 중에 하나여야 공기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즉, 민간자본이 철도 산업에 뛰어들 수 있게 민간자본의 편의를 최대한 봐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민자철도팀장은 이미 “많은 민간 업체들이 저희와 활발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부천 소사역~고양 대곡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사업은 현대건설이 맡아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 송도~강릉 고속철도 사업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이, 김천~거제 고속철도는 현대건설이, 오송~평택 고속철도는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고 있다.

최근 철도 민영화 추진이 다소 늦춰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민자 철도 방안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



외주화가 낳은 참사 경주 지진 당시 KTX 선로 유지·보수 중 사망한 노동자도 외주업체 노동자였다.

이다.

정부는 재정 지출 삭감을 위해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대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자철도를 활성화하게 되면, 철도공사는 수익성 경쟁에 더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는 철도공사가 요금 인상, 적자선 폐지, 인력

감축 등을 밀어붙이게 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의 피해는 이미 건설된 민자철도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는 철도 부문에서 처음으로 민자로 추진된 노선인데, 예측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정부 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자 결국 2009년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다. 그러나 2015년에 정부는 인천공항철도를 다시 매각했다. 이후 인천공항역~서울역 구간 요금은 4천1백50원으로 올랐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1천8백50원인데, 다음 정류장인 운서역까지 가면 요금이 3천2백50원으로 꺾충 뛴다. 이렇게 황당한 요금 체계는 모두 민간자본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처다.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신분당선도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분당선보다 1천2백 원, 광역버스보다 4백50원이나 비싸다.

안전

서울지하철 9호선도 2012년에 1천50원이던 요금을 1천5백50원으로 올려려다가 상당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민자철도 확대는 공공성이 아니라 수익성을 더 노골적으로 우선하게 만들 것이고, 이는 열차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개통 당시부터 비용절감을 강조하며 5무(無), 즉 역장, 역무실, 매표소, 현업사무소, 숙직을 없앴다. 역에 여러 명이 상주하며 교대로 근무하는 다른 지하철 공사와 달리, 지하철 9호선 승무원

들은 비속박 근무다. 열차운행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을 해야 해서 피로도가 매우 높다.

최근 김천에서 선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두 명이 KTX에 치여 숨졌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KTX 열차가 지연됐는데, 지연 운행 사실을 모른 채 작업에 나섰다 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제2의 구의역 사고인 셈이다. 외주화가 이런 참사를 낳고 있는데, 하물며 민간 자본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유지·보수 인력을 줄이거나 외주화를 확대하면 이런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자철도 확대는 2005년 일본 후쿠치야마선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 전동차가 탈선하면서 아파트에 충돌해 승객 1백6명과 기관사 한 명이 사망하고 5백62명이 부상한 이 사고는, 이 지역에서 11곳이 넘는 철도 회사가 경쟁하다가 일어난 비극이었다.

사고 열차의 기관사는 운행 시간이 많이 지연되자 과속한 상태에서 역에 진입을 하다 사고가 났다. 철도 회사들이 열차 시간표를 초 단위로까지 짜면서 기관사들을 압박했고, 열차가 늦으면 징계를 줬기 때문에 기관사가 받은 압박이 상당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수익을 우선하느라 안전과 공공성을 내팽개칠 민자 철도 확대 방안은 중단되어야 한다.

백은진

서울의료원 미화노동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 존중’ 약속,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 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7월부터 민간위탁기관 직원 1천4백80명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6천30원인데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이보다 20퍼센트 높은 7천1백45원이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의 사례를 보면 이런 약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표적 공공병원이다. 서울시는 임금 항목 중 ‘기본급과 식비, 교통 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기준에 비춰 보면, 서울의료원 노동자들 중 기능직 등 수백 명이 생활임금도 못 받고 있다.(올해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임금인상 11.5퍼센트를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또, 서울의료원은 지난해 외주화돼 있던 미화(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임금이 줄었다. 간접고용 당시에는 기본급 1백

21만 원에 식대 5만 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직고용 이후 서울의료원은 기본급 1백25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

그나마 미화노동자들 중 60세를 넘지 않은 노동자들 일부는 올해 7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임금이 적잖이 올랐다. 식대, 교통 보조비, 월동 보조비, 효도비 등으로 30만 원가량 더 받게 됐고 처우 개선 수당도 15만 원가량 더 받아 현재 매달 1백62만 원을 받는다. 그럼에도 기본급과 식대, 교통 보조비를 합친 금액은 1백34만 원으로 서울시가 약속한 생활임금(월 1백49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차별 고착화

무엇보다 이는 미화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액수다. 서울의료원은 미화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기능직은 물론이고 다른 무기계약직과도 다른 임금표를 만들어 적용했는데, 여기에는 기본급의 4백 퍼센트(매달 약 35만 원)인 상여금이 빠져 있다. 또, 수당을 신설한 대신 기본급을 이전보다 13만 원이

나 삭감했는데 이는 이후 임금 인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요컨대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산하 공공기관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경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의료원분회장은 서울의료원 측이 미화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차별 해소에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에서도 그것도 정규직화(무기계약직)된 노동자들도 이런 상황이니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생활임금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에요.”

“기업조조인 서울의료원노조(제1노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병원 측과 싸우는 데 소극적이에요. 기관성과 급도 그렇고, 서울시가 산하 기관의 총액임금을 정해 두고 이를 노동자들끼리 나눠라 하는 식으로 지급하니까 차별을 받아들이는 게 기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기존 노동자들과 새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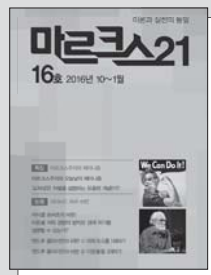
이에 차별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아요. 정규직 임금도 그냥 오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료원 측은 올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금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어요. 대상자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게 된 거죠. 올해 협약에서는 보육수당도 삭감됐는데 병원 측은 지난해에 지급하지 않은 보육수당도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워낙 임금이 낮다 보니 지난해 박원순 시장도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임금을 11.5퍼센트 인상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그 일부만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원장과 부원장을 비롯한 관리직의 업무 수행비는 30~1백 퍼센트 대폭 인상했죠. 그런데 서울시에 찾아가서 서울의료원 감사를 하라고 해도 듣는 등 마는 등 해요.”

박원순 시장은 생색만 내지 말고 ‘생활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서울의료원의 미화노동자 차별도 즉시 시정해야 한다.

장호중

새로 나왔습니다



마르크스21 16호

164쪽 | 10,000원

특집: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페미니즘
‘교차성’은 차별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인가?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 조직자들의 ‘외부 세력’, ‘운동권’ 배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국가 이론은 어떻게 현실의 검증을 이기지 못했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어느 것도 대안이 아니다
이동 학대의 근원

논쟁: 데이비드 하비 비판

데이비드 하비에 대한 답변: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경제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
앤드루 클라이먼의 데이비드 하비 비판 ①
마르크스를 오해하기
앤드루 클라이먼의 데이비드 하비 비판 ②
이윤율을 오해하기

화물연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악 반대한다

전국의 화물 노동자들이 9월 24일 서울로 상경해 집회를 갖고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하반기 투쟁을 결의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8일 박근혜가 서비스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서 “화물운송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지 하루 뒤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고 매년 5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정작 이 “낡은 구조” 때문에 가장 고통 받아 온 화물 노동자들은 “진정한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물류·유통기업의 이익만을 반영한 구조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입제

화물 노동자들은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와 다단계 중간착취 구조로 인해 낮은 운임과 운송사의 횡포에 시달려 왔다.

화물 노동자가 빚을 내서 화물차를 마련해도 정부로부터 화물운송사업을 허가 받은 사업주(운송업체)와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맺어야만 화물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입제도다. 이렇게 지입료만으로 먹고사는 회사가 전체 운송업체의 절반이 넘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화물의 94.5퍼센트(대략 21만 7천대)가 지입차량인데, 월평균 지입료는 19만 2천 원이다. 화물 노동자 전체가 매달 4백17억 원, 1년에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입료로 고스란히 빼앗기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허가를 받은 번호판을 운송업체가 소유하기 때문에, 운송업체들은 화물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번호판 ‘웃돈’을 갈취해 왔다.

지입제는 다단계 중간착취를 만연케 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지입제 때문에 화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물동량’만 확보해서 운임의 10퍼센트를 알선수수료로 챙겨 먹고사는 주선업체들이 난립한다. 결국 다단계로 ‘물동량’ 알선이 이뤄지면서 40퍼센트에 이르는 금액이 알선수수료로 빠져나가 화물 노동자들은 애초 운임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의 돈만 받기도 한다.

정부도 지입제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그래서 2014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일부 개정해서 운송사가 함부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화물 노동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계약기간 6년’으로 보장 기간을 한정했다. 6년이 지나면 다시 운송업체들이 ‘번호판 권리’를 마구 휘두르며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



화물운송시장 진입 제한 완화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떠넘기려는 것.

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서도 지입제의 문제점은 알지만 없애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화련·통합물류협회와 같은 운송·물류 기업들이 지입제 폐지와 직영 확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은 “지입차주(화물 노동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직영차량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간다는 정부의 보완책도 지입제가 존재하는 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수급조절 폐지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정작 문제의 원인인 지입제는 내버려 둔 채, 오히려 수급조절을 폐지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은 1.5톤 미만의 택배용 화물차, 소형 화물차의 수급조절을 폐지한다는 방안이다. 화물차 수급조절은 2004년부터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노동자들은 소형 화물차의 수급조절이 풀리면, 소형차 자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톤급 상향조정으로 전체 화물차의 과잉공급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

물류·운송 기업들이 화물차 직영 확대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수급조절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떠넘기기 위해서다. 특수고용직인 화물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 고용의 안정성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화주·운송업체는 매달 차량 할부금, 보험료 납부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운임을 강요하려고 수급조절 폐지를 요구해 왔다. 운임뿐 아니라 과적, 장시간 운행도 강요하기가 더 쉬워져,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도로 안전

도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우려가 공연한 것이 아니라라는 점은 최근 화물운송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화물정보망 어플(‘화물앱’)만 봐도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은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은 알지 못한 채, ‘화물앱’에서 제시하는 운임만 보고 화물운송을 선택해야 한다. 조건이 좋지 않은 물량들이 ‘화물앱’으로 몰리고, 과적 문제가 있어도 일감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이 곳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미 CJ대한통운과 아시아 최대 물류 스타트업이라는 ‘고고벤’ 등이 화물정보망 어플에 진출해 있는데, 정부는 이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서 ‘화물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디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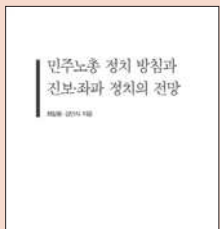
화물 노동자들은 높아진 위기감 속에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9월 24일 상경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지역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예년보다 더 뜨거워진 호응을 실감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9월 24일 서울에서 결의대회와 함께 연달아 치러지는 조합원 총회에서 정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하반기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번번이 어긴 정부가 하루 상경 집회와 파업 결의만으로는 좀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9월 24일 집회를 디딤돌로 삼아 실질적인 파업을 준비하고, 더 많은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장우성

노동운동의 주요 쟁점을 다룬 노동자연대의 소책자를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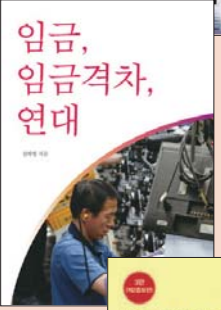
민주노총 정치 방침과 진보·좌파 정치의 전망

김인식, 최일봉 지음
148쪽 4,000원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으로 본 재벌개혁론 비판

강동훈 지음
96쪽 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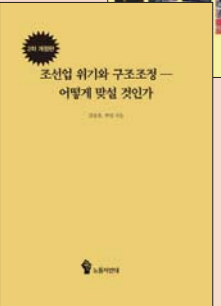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지음
136쪽 4,000원



박근혜의 '노동개혁'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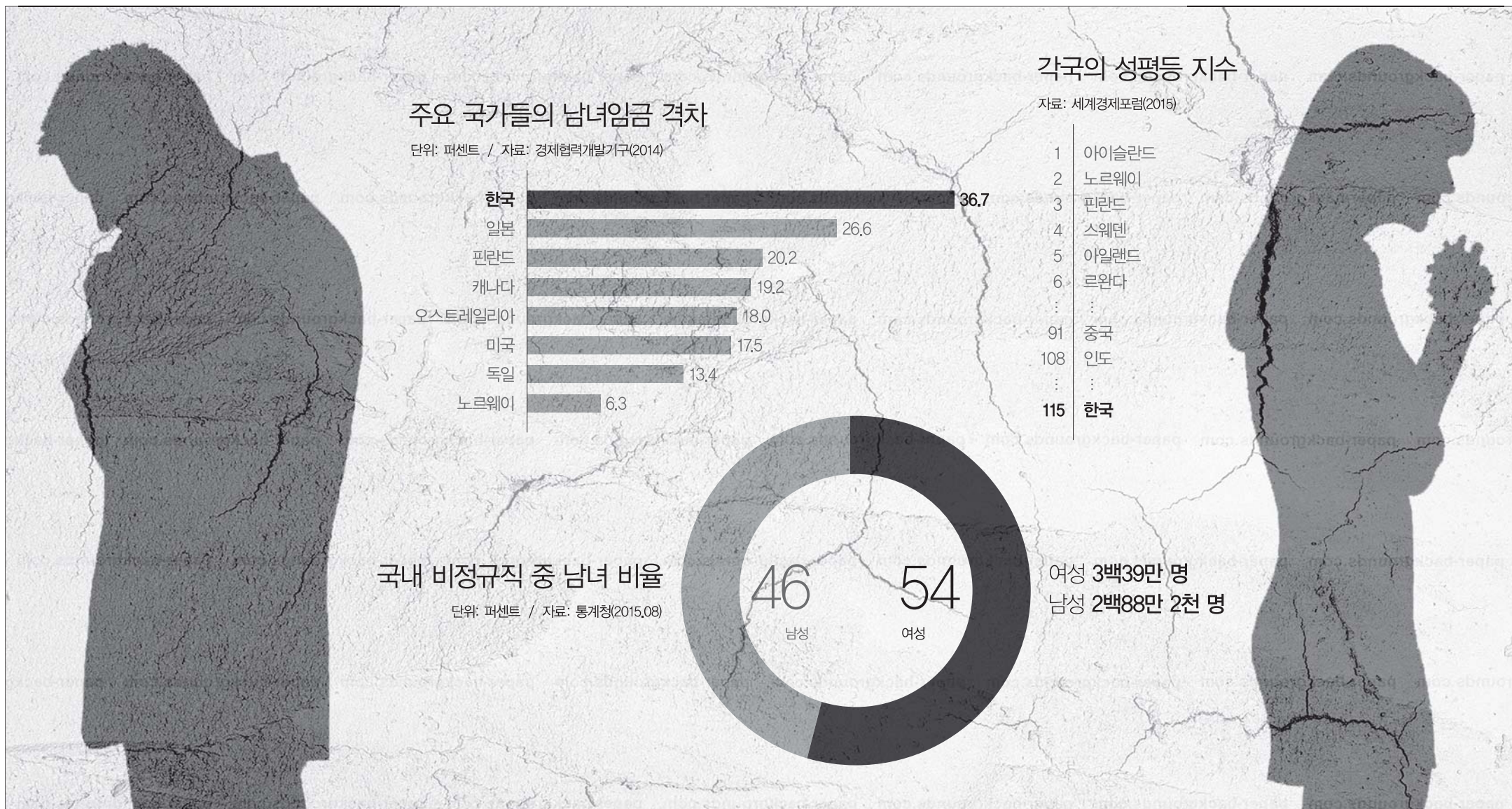
김하영 지음
188쪽 5,000원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 것인가

강동훈, 박설 지음
68쪽 2,500원

구입문의: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만연한 기업 성차별 성차별은 체제의 문제다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시작했지만, 대체로 여성 채용을 기피한다. 또, 얼마 전에 게임 업체 넥슨은 메갈리아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성 성우를 해고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이지원**이 기업의 성차별을 살펴본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은 비밀비재하다. 한국은 2015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평등 지수'에서 145개국 중 115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 여성들의 고등기관 진학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2009년에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82.4퍼센트로 남성(81.6퍼센트)을 추월했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 2015년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여성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3세 이상 인구의 85.4퍼센트에 이른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남녀 모두의) 의식이 변화하는 추세이지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은 여전하다. 역겹게도 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온갖 성차별을 유지·조장하고 사회 전체에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1987년에 만들어진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별, 혼인 또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30년이나 됐지만,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상당하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 부동의 1위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6.1퍼센트로 OECD 28개국 평균(15.8퍼센트)의 2배를 훌쩍 넘는다. 1989년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법에 명문화됐지만, 기업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부리며 차별을 유지해 왔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말과 1999년대 초반에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노동 단체들의 저항으로 금융권의 '여행원제도'는 폐지됐다. 금융 기업들은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남성 노동자들과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해 차별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기업들은 분리직군제를 핵심으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해 여성 노동자들을 차별했다. 분리직군제는 임금·승진 차별을 고착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015년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 11개 은행 여성들의 평균 연봉은 남성들의 63퍼센트에 불과하고 여성 임원 비중은 6.6퍼센트에 머물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5천6백만 원)은 남성 직원의 평균 연봉(1억 원)의 절반 가량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은행에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보다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2013년 기준 여성 노동자 7백62만명 중 57.5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통계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은 정규직 남성 노동자 임금의 35.4퍼센트밖에 안 된다. 임신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이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도 여전하다. 악명 높던 '결혼퇴직제'는 1970~80년대에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노동단체들의 저항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얼마 전 주류업체 금북주가 결혼을 앞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폭로돼 사회적으로 큰 빈축을 산 바 있다.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 카페를 조금만 둘러봐도, 면접 때 유독 여성에게만 "결혼은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사례가 꽤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41.4퍼센트로, 꾸준히 느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특히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직장맘센터의 1년치 상담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2퍼센트나 됐다.

'사원 복지' 운운하는 대기업에도 여성 차별은 만연하다. 지난 6월 삼성물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들에게 '각종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것이 폭로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삼성 물산은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건설 회사 1위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는 가임기 간호사들이 관리자들의 지시하에 임신 순번을 정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저출산을 해소해야 한다며

서도 정작 이런 기업들의 행태에는 강력히 제동을 걸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 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외모차별 금지 조항'이 있다.

여성들에게 "단정한" 외모를 요구하는 채용 광고들은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얼마 전 박근혜가 방문하는 정부 주관 행사였음에도 행사업체가 통역사 채용 광고에 '용모 중요·예쁜 분'을 조건으로 제시해 지탄의 대상이 됐다.

대형 영화관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여성들에게 화장과 구두 착용 등을 강요하고 립스틱 색깔까지 지정해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알바노조가 공개한 'CGV 미소지기 용모 복장 기준'을 보면, 여성 노동자들은 생기가 있는 피부화장을 반드시 하고, 눈썹 형태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열은 눈 화장과 붉은 립스틱은 필수라는 규정이 있다. 심지어 본사가 정한 외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달의 꼬질이'로 선정해 벌점을 주고 있다.

채용 시 외모를 보는 관행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각종 스펙을 쌓는 것에 더해 외모까지 신경써야 하는 처지다. 그래서 흔히 여대생들이 취업 준비에 뛰어 들면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는 "면접 화장 배워 보기", "이력서 사진 잘 찍어주는 사진관" 따위의 것들이다. 심지어 '면접 성형'이라는 것도 생겼다!

성 상품화

기업들은 노골적으로 여성의 몸을 상품화해 이윤을 벌어들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념을 퍼뜨린다. 호프집 벽에 붙은 흔한 주류광고는 물론이고, 음료, 택배, 면도기, 이동통신사까지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부각한 광고를 천지다. 대형 연예인 기획사들은 젊은 여성들을 거의 벌거벗겨 놓고 섹시 춤을 추게 해서 돈을 벌고, 언론과 TV프로그램들은 그런 몸매와 섹시미를 갖는 것이 여성의 본분이라도 되는 양 치켜세운다. '못생기고' 뚱뚱한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재미있는 것으로 치부된다.

메갈리아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여성 성우와의 계약을 해지한 넥슨은 게임에 웃은 반면 걸치고 가슴과 엉덩이를 부각시킨 여성 캐릭터를 출현시켰다가 항의에 직면했다. 결국 <서든어택2>는 23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렇듯 기업들의 성차별적 행태는 너무 많아 지면이 모자랄 지경이다. 기업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차별적 구조를 유지하고 차별 관념을 퍼뜨릴 수 있는 진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안 좋은 노동조건을 강요함으로써 이득을 얻는다. 이것은 결국 여성 노동자들뿐 아니라 남성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을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주들에게 더욱 이득이다. 이렇듯 자본주의 체제의 차별과 억압은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더욱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전진할 수 있다 2015년 홈플러스 파업집회.

여성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폐기해야

한국의 여성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저임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8일 OECD의 발표를 보면, 2016년 기준 여성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임금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 비중은 37.8퍼센트로 OECD 비교가능한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00년의 45.77퍼센트에 견주면 떨어진 수치이지만, 다른 OECD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뒤를 잇는 나라는 아일랜드, 미국, 영국, 독일 순이었는데, 이 나라들도 한국보다 7~12퍼센트포인트 가량 낮았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면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런 저질 일자리 양산 정책은 여성들을 더욱 저임금층으로 내몰게 할 것이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단하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와 국공립 보육시설과 같은 질 좋은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착취와 차별에 맞선 투쟁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받는다고 해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이 주변적이거나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여성 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44퍼센트를 차지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노동계급의 주요한 일부가 됐다. 여성 노동자들 역시 파업 등 노동자로서의 고유한 힘을 발휘한다면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집단이다.

최근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해 전진을 이룬 사례는 많다. 각종 수당 문제 해결, 정기 상여금 쟁취 등 전반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호한 파업 등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몇 년 전 인기를 얻은 영화 <카트>는 2007년 실제 있었던 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을 다뤘다. 여성 노동자들은 투쟁 속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한껏 보여줬다. 이랜드일반노조는 매장 점거파업을 통해 꺾어도 앓던 사측을 교섭테이블로 끌어내고 비정규직 쟁점을 전국적으로 떠오르게 했다. 최근에도 홈플러스 등 마트 노동자들이 투쟁



임신한 여성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는 보라매병원 노동자들.

을 벌여 사측의 양보를 얻어낸 바 있다. 2000년대 이래 조직된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정책에 도전하는 투쟁에서는 여성 조합원 비율이 높은 전교조, 보건·의료 관련 노조 등 여성 노동자들도 남성 노동자와 함께 나섰다.

착취와 차별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남성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했고, 지지를 보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7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의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다. 익산역 역무원인 한 여성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려 하자 여성인 관리자가 “산부인과에서 확인서를 떼다 내려”,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말까지 일삼으며 연차로 대체할 것을 강요했다. 그 과정에서 다수 남성 조합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일로 삼아 함께 문제제기를 했고, 현재까지도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함께 싸우고 있다.

이런 고무적인 사례들은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기업들의 성차별적 행태에 맞서 남녀 노동자가 함께 단결해 싸우자.

독자편지

ws@wspaper.org

2016년 10월 2일(일)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심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기아차

여성 화장실·휴게실·사워장 설치하라

최근 김포공항 청소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과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열악한 처우를 주저 없이 폭로하고 성추행 등의 만행에 울분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투쟁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글로벌 기업 기아차에도 나처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식당, 차량검사, 도장, 플라스틱, 사무실 등 곳곳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화성공장에만 9백여 명이나 된다.

이 노동자들의 처지는 매우 열악하다. 특히 화장실을 청소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휴게실도, 샤워장도, 여성 화장실도 없이 매일 곤욕을 치른다.

지난해 말 나는 용기를 내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대자보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뿌리는 등 항의 행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교묘한 탄압을 받으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지지를 보내 줘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이를 발판 삼아 올해 초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는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확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측은 내가 일하는 부서(소재공장)의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그 곳에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 화장실, 휴게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화성지회) 간부가 신축 건물 도면까지 보여 주며 이를 확인시켜 줬다.

그런데 반년이 넘게 시간이 흘러 소재공장 건물이 완공됐는데, 황당하게도 여성 휴게실과 샤워장은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다. 화장실만 설치된 것이다. 화성공장 전체로 보면, 개선된 곳은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 여름,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러는 동안 기아차 화성

공장의 청소 노동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서 샤워는 고사하고, 에어컨도 없는 쪽방 같은 간이 휴게실에서 참고 또 참으며 지냈다.

기초적 요구에 모두 나서야

그런데 막상 신축 건물에조차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사측에 심한 배신감이 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부·지회 집행부가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여성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지 않은 것도 실망스러웠다. 사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차원의 공식적인 항의 행동을 조직해야 할 텐데,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기아차는 세계 5위의 자동차 기업이다. 사내유보금이 1백12조 원이나 되고, 본사 이전을 위해 한전 부지를 매입하는 데만 10조 원을 썼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해 주식 배당금으로만 8백23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이런 회사가 지금 몸을 씻을 곳도, 살인적인 더위를 피할 곳도 없는 여성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는 이런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노조가 항의 운동을 건설해 사측에 본패를 보여 줘야 한다. 여성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 설치하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갖추고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요구다.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사측에 맞서야 한다.

여러 괴롭힘과 약속 번복이 있었지만, 나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내하청 분회와 정규직 지회·지부, 더 많은 동료 조합원들의 지지를 모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애쓸 것이다.

김경숙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화성공장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용 화장실 내 한 칸을 여성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이유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차에 따라 저절로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열제(호봉제)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물음이 자연스레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왜 애당초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연공서열제를 도입했지? 다른 나라들은 어쨌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한국에서는 연공서열제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노동력을 끌어들이기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연공서열제는 일본의 전후 재건 과정에서 도입되기 시작돼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됐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한참 뒤처지기는 했지만 두 나라 모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연공서열제를 도입했다. 평생고용을 전제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제도는 젊은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한편, 숙련 노동력을 붙잡아 두는 효과적인 유인책이었다. 재직 기간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체계는 취업 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우는 노동자들의 생활 패턴과도 부합했다.

OECD에 속한 다른 서방국들의 경우, 민간부문에서는 성과급제가 널리 퍼져 있었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 크게 성장한 공공부문에서 주된 임금형태는 직무급이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직무급제를 성과주의의 도입의 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적어도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이들 나라에서 직무급은 성과급제보다는 연공서열제와 공통점이 많았다. 직무 사

이에 무척 단순한 구분만 있었고, 숙련도를 평가하고 임금을 책정하는 데 경력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였다.

민간부문의 성과급제도 호황, 즉 성과를 내기 좋은 조건에서 평가되는 것이니만큼 오늘날처럼 팍팍한 것은 아니었다. 요컨대 이 시기 주요 선진국들의 임금체계가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덜 통제적이었던 것도 경제 상황이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다. 장기 호황 속에서 완전고용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한 임금체계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개별 자본의 이윤 경쟁 때문에 늘 눈앞의 '성과'에만 매달리는 민간부문에 비해 자본가들의 공동투자 성격 띠는 공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 압력이 덜했다. 이 때문에 자본가들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혔지만 실제로 두 부문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호황을 배경으로 한 임금체계는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자본가들의 도전에 부딪혔다. 공공부문의 투자 비용이 대개 세금자들의 생활 패턴과도 부합했다.

"1980~90년대 일부 OECD 국가들에서 공공서비스에 성과급을 도입하려

는 시도가 벌어졌다. 공공기관들은 '국가 재정 위기', 즉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된 경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는 공공기관을 [민간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화했다. 노동 과정을 점검해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성과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신공공관리' 정책의 기원이다."(프란시스코 카도나, 'OECD와 EU 가입국의 공공기관 성과급')

자본가들의 초기 부담을 훑날로 미뤄 둔 연공서열제는 더한층 난관에 봉착했다. 임금부담 자체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연금, 퇴직금, 의료보험 등 강제 저축 방식으로 미뤄 뒀던 임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부담이 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많은 개혁적 학자들이 밝혀냈듯이 한국 자본가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거대한 부를 동원하면(부유세 등)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자본가들의 공세를 저지하고 세력 관계를 뒤집을 만한 계급투쟁이 뒷받침되느냐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린 1990년대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했다. 한국의 경우

IMF 위기가 그 촉매가 됐다.

"한국 정부가 능동적으로 추진한 IMF의 구조조정 패키지는 다섯 가지 주요 영역으로 이뤄졌는데, 그중 두 영역이 직접적으로 정부 기구에 관한 것이었다. 첫째, 정부는 예산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통화 정책을 단단히 동여댔다. ... 둘째, 정부는 국가의 기능을 재조직했는데 이른바 "작지만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이 목표 하에 중앙정부의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식으로 재조직화했다. 공공부문 개혁의 또 다른 목표는 공공부문의 고용 규모를 줄이고, 국유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임금·고용제 저축 방식으로 미뤄 뒀던 임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데이비드 헨리, 《한국의 개발 동맹 - 국가, 자본 그리고 고속성장의 정치학》)

두 나라가 OECD의 다른 나라들과 달랐던 점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성과주의를 도입·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보다 한국 노동자들의 저항이 훨씬 완강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경우 평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 문제는 자본가들의 공세를 저지하고 세력 관계를 뒤집을 만한 계급투쟁이 뒷받침되느냐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린 1990년대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했다. 한국의 경우

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이 상대평가 방식의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완화하기도 한다. 또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경쟁 강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 주된 목표가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비용 절감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정지출을 줄였는지도 뚜렷하지 않다. 경제 위기에 공공서비스 지출은 오히려 늘어 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나라 정부들이 여전히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IMF는 올해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정부의 재정 균형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IMF, '정부 고용과 보수 관리 - 기관, 정책, 그리고 개혁 도전')

왜 이토록 맹목적일까? 간단히 말해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기업 이윤을 번영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여기는데, 이는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어떻게든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 전망보다는 단기적 성과가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자본가들에게 공공부문 확대는 자신들의 투자를 제약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이중의 부담으로 여겨진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민영화도 집요하게 추진하는 이유다.

정호준

금융노조 파업

9월 23일 은행 창구가 빈다

금융노조는 '9월 23일 은행 영업점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는 실질적인 총파업을 만들'자고 현장에 호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 전체 지부 대의원들이 9월 10일에 합동 대의원대회를 열고 최대한의 파업 참가 조직화와 2·3차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추세와 열기로 바서는 금융노조의 역대 최대 산별 파업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늘 그렇듯이 파업 조직화 과정에서 지부별 편차가 있는 듯하다. 올해 말에 금융노조와 각 지부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것도 부분적으로 파업 조직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듯하다. 금융권은 성과주의가 많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일부 후진적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찬성할 수도 있고, 꼭 파업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사측은 이런 점을 이용해 조합원들을 이간질시키고 파업 참가 열기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각 지부 위원장들이 사측의

김문성



적극 지지
노사 자율

더불어민주당 당론 없음
정의당 반대

9월 23일 금융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파업을 앞두고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공공부문 노조원 3백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노동자들은 정부 측 토론자들의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한 노동자는 성과 평가에 따른 임금 지급이 "공정한 보상"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 수준은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쳤다. 10년 동안 낮은 임금에 허덕였는데, 이제는 성과연봉제로 목줄을 죄려 한다. 이것이 공정한 보상인가?"

서울대병원 노조의 한 간부는 "정부는 저성과자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인가? 병원 측은 직원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신규 직원을 투입해 놓고 저성과를 받아 '착장은 학교가 아니라'고 말한다. 부족한 인력 충원이 대안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말하지만 [정부는] 그런 방법이 없다. 방법도 없이 시행하자는 거냐"며 객관성과 공정성 운운하는 정부의 위선을 꼬집었다. "우병훈 수석이 고위 공직자 인사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공정한 인사는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과 부르주아 야당들의 차이

이런 토론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위와 더민주당의 김부겸, 이용득, 강병원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지금 야당들이 모두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추진 방식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공조를 통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노동운동 내에 적지 않다.

그러나 야당이라고 다 같은 견해는 아니다. 일단, 정의당은 올해도 성과연봉제 자체를 분명하게 반대한다. 최근 심상정 대표는 공공운수노조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원칙을 분명히 밝히며 파업에 지지를 보냈다. 이장미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상대평가에 따른 과도한 강제 임금 차등과 강제 퇴출로 연계되어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과연봉제의 핵심 문제점인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 가능성이 모두 분명히 비판한 것이다.

6월 하순 10만 명이 모였던 성과연봉제 반대 공공부문 집회 때, 심상정의 원이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대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의당 중앙과 기초 당조직들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행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반면 부르주아 야당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피죄죄하게도 국민의당은 한국노총도 폐기한 2015년 노사정 합의를 거론하며, '노사 자율'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박지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		성과연봉제 찬반	대표 정치인의 입장
정의당	반대	반대	심상정 대표, 공공운수노조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파업 지지" 표명
더민주당	일방 강행은 문제	성과연봉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 주류, 박원순, 이용득 등은 반대 입장 / 당론 없음	추미애 대표, 성과연봉제 비판은 하지만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모호한 결론에 그침
국민의당	노사 자율 추진	성과연봉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음	박지원, 일방 추진은 문제, 그러나 "성과연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새누리당	적극 지지	적극 지지	정진석 원내 대표, 청년 연장 "해택을 주는 대신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려는 것, 그런데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원은 정부의 일방 강행을 비판하면서 도 "성과연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공공부문 노조들과 공조하고 있지만, 이들이 더민주당의 주류는 아니다. 오히려 공공부문의 "방만한"을 개선하려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다. 그래서 더민주당은 '성과연봉제 일방적 강행 반대'라고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당내대표 우상호는 성과연봉제의 폐해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지적하면서 도,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거나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놓았다.

근본적으로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부르주아 정당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지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쥐어짜 기업의 이윤을 키우려는 성과연봉제 같은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 위기 평가에 따른 과도한 강제 임금 차등과 강제 퇴출로 연계되어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과연봉제의 핵심 문제점인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 가능성이 모두 분명히 비판한 것이다.

6월 하순 10만 명이 모였던 성과연봉제 반대 공공부문 집회 때, 심상정의 원이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대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의당 중앙과 기초 당조직들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행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반면 부르주아 야당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피죄죄하게도 국민의당은 한국노총도 폐기한 2015년 노사정 합의를 거론하며, '노사 자율'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박지

갈등 조정?

한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압박하자, 일각에서는 "국민 불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갈등 조정자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워낙 막무가내이니 여소야대인 국회가 적극 나서라는 측이다. 더민주당이 노조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매우 미흡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 더민주당을 압박해 일방 시행을 뒤로 미루고 국회에서 재논의 장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앞서 언급한 9월 19일 국회 토론회에 맞춰자로 나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1년간 유예하고, '공공기관 성과주의의 진단 기구'를 구성해 정부·국회·노조가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특위)'를 구성하자는 것.

이 같은 주장은 꽤나 위험할 수 있다. 우선, 그가 내놓은 "대안적 임금제도"의 내용이 그렇다. 노광표 소장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노조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노조도 한 발 양보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 등)가 "인건비 부담과 교령자 직무개발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연공·직무·성과를 모두 고려하는 "공공부문의 대안적 임금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사용자들이 연공제 임금체계를 뜯어고치려는 핵심 목적 중 하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연공형 임금체계가 "인건비 부담"을 키운다는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이 참에 '합리적' 체계를 논의하자는 식의 태도로는 임금체계에 개혁이 일관되게 반대하기 어렵다. 사용자들이 말하는 임금체계의 '합리성'은 노동자들 사이의 공정성이나 형평

성이 아니다. 임금 삭감과 노동력 관리에 무엇이 유리하냐가 그들의 '합리적' 기준이다.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정부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보면, 정부 공격에 뗏목을 열어 줄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성과연봉제 지지 투쟁에서 임금·노동조건 방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공격에 일관되게 반대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투쟁에 나서게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환노위의 다수인 더민주당 등 부르주아 야당과의 협력이 중요해진다.

그런데 설사 더민주당이 중재에 나서 '유보 후 논의' 등을 제안하더라도, 이는 결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파업이 가하는 어지간한 압력이 아니라면, 정부나 여당이 이런 중재안조차 받아들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반면, 중재를 위해서는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압력이 뒤따를 것이다. 이는 결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파업이

야말로 노동자들이 정부를 압박할 가장 효과적 수단인데, 이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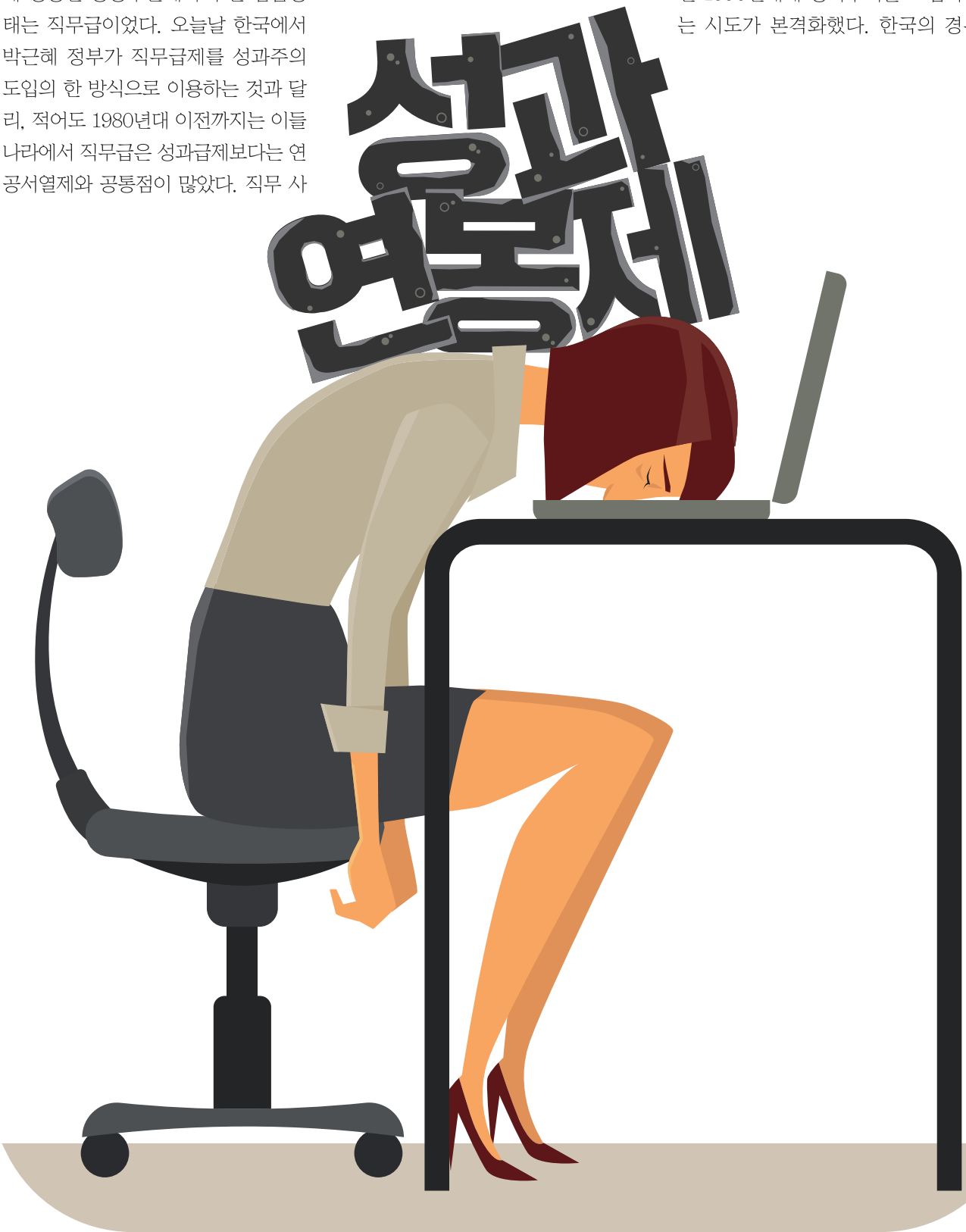
그동안 더민주당이 노동자 투쟁의 김을 빼고 교란시키는 구실을 해 온 점을 경계해야 한다. 더민주당은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 때도 노동자들에게 공무원연금 개악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구실을 했다. 더민주당의 중재 시도로 2013년 철도 파업 이후 구성된 국회 소위는 민영화를 저지하기는커녕 회계 분리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 세월호 특별법 개정 원안을 배신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더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확고하게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역시 쉽사리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집권당의 내분과 정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완강하게 투쟁하면 이 위기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요구를 성취할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파업과 시위를 벌이며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도 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정원

파업에 대한 연대가 건설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활동도 준비되고 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같은 전국적 연대 기구가 건설돼 연대에 나서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연호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거나 연대 활동이 계획되고 있다.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거리 홍보전, 파업 집회 참가 등, 이런 활동들은 파업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김준호

지난 8월 31일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탄핵 표결이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그 후, 10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라질 정치는 여전히 격랑에 휩싸여 있다. 호세프 탄핵 후 내각이 교체되면서, 호세프의 전임 대통령이자 호세프 내각의 일원이었던 룰라가 부패 혐의로 다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여당이었던 노동자당(PT)은 큰 타격을 입었다. 탄핵의 직접적 사유는 연방정부 회계 '조작'이었다. 하지만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로 노동계급의 대중은 노동자당에 크게 실망했다. (관련 기사: 169호 '브라질: 대규모 반부패·반정부 시위로

정치 위기가 심화하다)

호세프 탄핵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중도우파 정당)의 미셰우 테메르는 9월 15일 도로·철도·공항·석유시설 등의 대규모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좌파들은 '미국이 후원하는 우파들의 헌법 쿠데타'(호세프 탄핵) 때문에 '서구 제국주의에 맞선 대안 체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두려워한다. 물론 호세프 탄핵을 밀어붙인 우파 정당들은 강경한 신자유주의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건 호세프와 노동자당에 대한 대중적 불신 덕분인데, 이는 노동자당이 지난 14년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긴축 정책에 대한 환멸 때문이다.



2013년 7월 11일 반긴축 총파업.

사진 출처 Ben Taverer (블리커)

노동자당 정부의 배신

브라질 자본주의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당이 집권하기 전인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를 강타한 외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1994~2002년)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철강·통신·전기·금융 부문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노동 유연화 조처들을 대거 도입했다.

룰라가 이끄는 노동자당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반감을 업고 2002년 말 집권했다. 그러나 룰라는 전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계승해 대자본의 이익을 보호했고, 민관협력에 기초한 민영화 정책을 도입했다.

노동자당 정부는 조세·노동 정책에서도 친기업적이었다. 룰라의 뒤를 이어 2010년 당선한 호세프 정부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노동자들과 연금 생활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했

다. 호세프 정부 1기 동안 소득이 최저임금의 3배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층이 세수의 절반 이상을 부담할 정도였다.

룰라 정부는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보다 노사정 협약이 더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브라질에서 고용 불안정이 더 심화됐다. 호세프 정부는 2003~13년 10년 동안 “중산층”이 4천4백70만 명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그 중 2천7백만 명 이상이 저임금·외주화·하청 노동자들이었다. 이들 중 대략 1천5백만 명은 고용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일했다.

고용 불안정이 너무 심해지자 노동자당 정부는 사회적 빈곤 수준을 낮추기 위한 조처를 취했다. 하지만 불평등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자당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 것은 우파들과 의회

에서 협력해 브라질 자본주의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배신을 가리기 위해서였다.

룰라 집권 이래 노동자당은 민주운동당을 비롯한 여러 중도우파 정당들과 선거연합 및 거국 내각을 구성했다. 이들 중도우파 정당 지도자들의 상당수는 군부독재 시절(1964~85년)부터 정·재계에 속한 인사들이거나 카르도주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자들이었다.

중도 우파 정당들과의 연정으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당은 신자유주의 어젠다를 대폭 수용했다. 그러다가 근래에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브라질 경제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사상 최대 불황에 빠지자, 호세프 정부는 교육·의료·주택·대중교통에 대한 대규모 긴축 정책을 시행했다.



노동자당 정부 14년의 신자유주의가 남긴 빈곤과 불평등.

사진 출처 Paulo Ferreira (블리커)

노동운동의 혼란 때문에 우파들에 기회를 빼앗기다

이 같은 정책은 노동자·서민의 반발을 샀다. 2013년 6월 긴축에 반대해 전례없는 규모의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관련 기사: 107호 '브라질 민중 1백만 명이 거리로 나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항의해 시작된 반긴축 운동은 월드컵 반대, 공공서비스 개선, 경찰 폭력 반대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대중 운동으로 성장했다.

운동이 확대되면서 1백만 명 규모의 반긴축 하루 총파업도 벌어졌다. 노동자당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브라질 노총(CUT) 지도부도 총파업 호소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대중적 반발에 직면한 호세프 정부는 긴축 정책을 철회·완화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힘겹게 재선에 성공했다. 상대 후보가 노골적으로 긴축을 요구하는 우파 후보였던 것도 당선에 한몫했다.

그러나 호세프는 재선하자마자 우파 정당들과 밀실 합의해 대규모 긴축 정책을 다시 추진했고, 그 때문에 대중의 신뢰를 크게 잃게 됐다.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을 이용한 우파들의 노동자당 공격이 먹힌 것도 이 같은 대중적 반긴축 정서 때문이었다. 교활하게도 우파들은 부패 문제를 호세프 정부의 반서민 정책과 연결시켜 호세프 정부를 공격했다.

환멸

물론 우파들 자신도 부패에 깊이 연루돼 있다.(호세프 탄핵을 주도했던 전 하원의장도 부패 혐의로 사임해야 했다.) 그러나 노동자당 정부 인사들, 특히 룰라 정부 때 입각했던 브라질 노총 지도부 출신 인사들도 부패에 연루돼 있긴 마찬가지였다. 이들 중 일부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대한 환멸을 느꼈다.

대자본과 우파 언론의 후원을 받는 우파적 시민단체들이 부패 혐의 시위를 조직하겠다고 나섰다. 2016년 3월 13일 브라질 전역에서 2백만 명이 참가한 반부패·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부르주아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과 우파적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조직했지만,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우파는 아니었다. 심각한 불황과 물가 인상에 분노한 도시 빈민과 하층 중간계급 사람들의 상당수도 시위에 동참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압도 다수가 보편적 국민건강보험과 무상 공교육을 지지했으며, 절반 이상이 무상 대중교통 제도를 지지했다.

2013년 대규모 반긴축 운동에서 활력을 얻은 노동자 운동이 긴축 정책 반대 요구와 반부패 요구를 결합해 투쟁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노총 지도부는 반부패·반정부 시위에 맞선 '맞불' 시위를 조직하면서, 그저 노동자당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갔다. 그리고 우파들의 호세프 탄핵 시도에만 반대했다. 이 때문에 우파들이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이용할 여지가 생겼다.

한편, 호세프 정부는 우파 정당과의

의회 내 밀실 합의로 탄핵 시도를 잠재우겠다는 허망한 시도에 매달렸다. 그러나 노동자당이 우파들과 타협해 긴축 정책을 더한층 추진할 때마다 노동자 대중 사이에 반정부 정서는 더 커졌고, 우파는 더한층 기세 등등해졌다.

무주택노동자운동(MTST), 사회주의와자유당(PSoL) 등 급진좌파 단체들과 일부 소규모 독립 노동조합들이 반긴축·반부패 대중 정서와 연관되려 노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연맹만 12개나 되는 데다 그조차도 저마다 다른 정당과 연결되어 있는 등 역사적으로 분열이 심한 브라질 노동운동 지형 속에서 큰 세력이 못 되는 이들의 영향력은 사태를 바꾸기에 충분치 않았다.

결국 다급해진 브라질 노총 지도부와 노동자당은 탄핵안 하원 표결 직전 대규모 거리 시위를 조직해 상황을 뒤집어 보려 했지만, 이미 승기는 우파들에 넘어간 뒤였다.

요컨대 노동운동과 좌파들이 긴축 정책에 일관되게 도전하는 운동을 건설하

는 데 실패한 탓에, 노동자당보다 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 경제 불황, 공식 정치의 부패, 긴축 정책에 대한 반감에서 득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호세프 탄핵 이후 수천에서 수만 명 규모의 탄핵 규탄 거리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테메르 정부는 이 거리 운동을 강경 탄압하고 있다. 이 시위에는 노동자당을 지지하는 노동조합들과 청년들뿐 아니라 급진좌파들도 동참한다. 이들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에도 맞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당과 우파에 맞설 뚜렷한 좌파적 대안이 부상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자당에 대한 무기력한 지지로 회귀하거나 우파가 더한층 득세하는 것에 의해 사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브라질의 노동운동 좌파들이 2013년 반긴축 운동에서 이끌어 낸 교훈과 함께, 거리와 작업장에서 긴축에 맞서 일관되게 투쟁하는 세력이 되기를 바라야 한다.

남아공 새 노총 출범 임박

차승일

남아공에서 새 노총의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새 노총 건설에서 주도적 구실을 하고 있는 남아공 금속노조(NUMSA)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8월 30일 열린 '새 노총 건설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알렸다. 31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9월 안에 새 노총 출범 날짜를 발표하기로 했다.

새 노총에는 조합원이 약 35만 명으로 남아공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 2014년 백금 광산에서 일어난 전투적 파업을 이끌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광원건설노조(AMCU), 범아프리카주의 성향의 노총인 전국노동조합회의(NACTU) 등이 주요 노조로 참여한다. 남아공노총(코사투) 사무총장이었다가 지난해 제명된 즈웰린지마 바비도 새 노총 건설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새 노총 건설에 참여하는 주요 세력을 보건대, 새 노총은 코사투보다 좌파적인 노총이 될 듯하다.

새 노총의 출범은 남아공 노동운동과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 될 것이다.

첫째, 남아공 노동조합 운동의 대표 조직으로서 코사투의 위상이 변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코사투 출범 때부터 주요 세력이었고, 코사투 내 최대 노조였다. 광원건설노조는 2012년 마리카나 광원 투쟁을 지지하며 급성장해, 이제는 광산업 내 최대 노조가 됐다. 광산업은 남아공의 최대 산업이고, 금속노조가 포괄하는 철강·자동차·건설업은 광산업의 뒤를 잇는 중요한 부문이다.

둘째, 1994년 이래 남아공 정치에서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남아공

공산당(SACP)·코사투의 삼각동맹이 득세해 왔다. 새 노총 건설에 참여하는 주요 세력들은 노동조합 운동이 ANC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C가 집권 이래 지난 22년간 신자유주의 정책들 추진에 여념이 없어서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즉, 새 노총의 출범은 ANC에 대한 좌파적 반대 운동을 고무해, 약화돼 온 삼각동맹(ANC-남아공공산당-코사투 노조)의 헤게모니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분열주의?

노동조합 상층 간부층의 시각에서 보면, 새 노총 건설은 코사투를 분열시키고 따라서 노동조합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새 노총의 출범은 남아공 사회의 더 큰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봐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1994년 ANC의 집권을 가능케 했고 또 그 집권으로 가능해진 변화는 남아공 인구의 압도 다수(86퍼센트)를 차지하는 흑인을 전체 영토의 13퍼센트도 안 되는 구역에 가둬 놓고는 통행의 자유마저 억압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무너뜨린 정말 큰 변화였다.

그러나 그 후 흑인 중간계급 상층의 처지는 크게 개선했지만, 노동계급을 포함한 대다수 흑인 대중의 염원은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여전히 남아공 인구의 15퍼센트인 1백90만 명이 판자 집에서 살고, 48퍼센트는 한 달 소득이 3백22랜드(약 30만 원)밖에 안 된다. 백인과 흑인 간의 격차도 여전하다.

여전히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 때문에 ANC 정부의 인기는 꾸준히 하락했다. 2000년대부터는 시위가 연평균 7천 건 일어났고, 세계경제 위기가 닥친 2010년부터는 파업도 활성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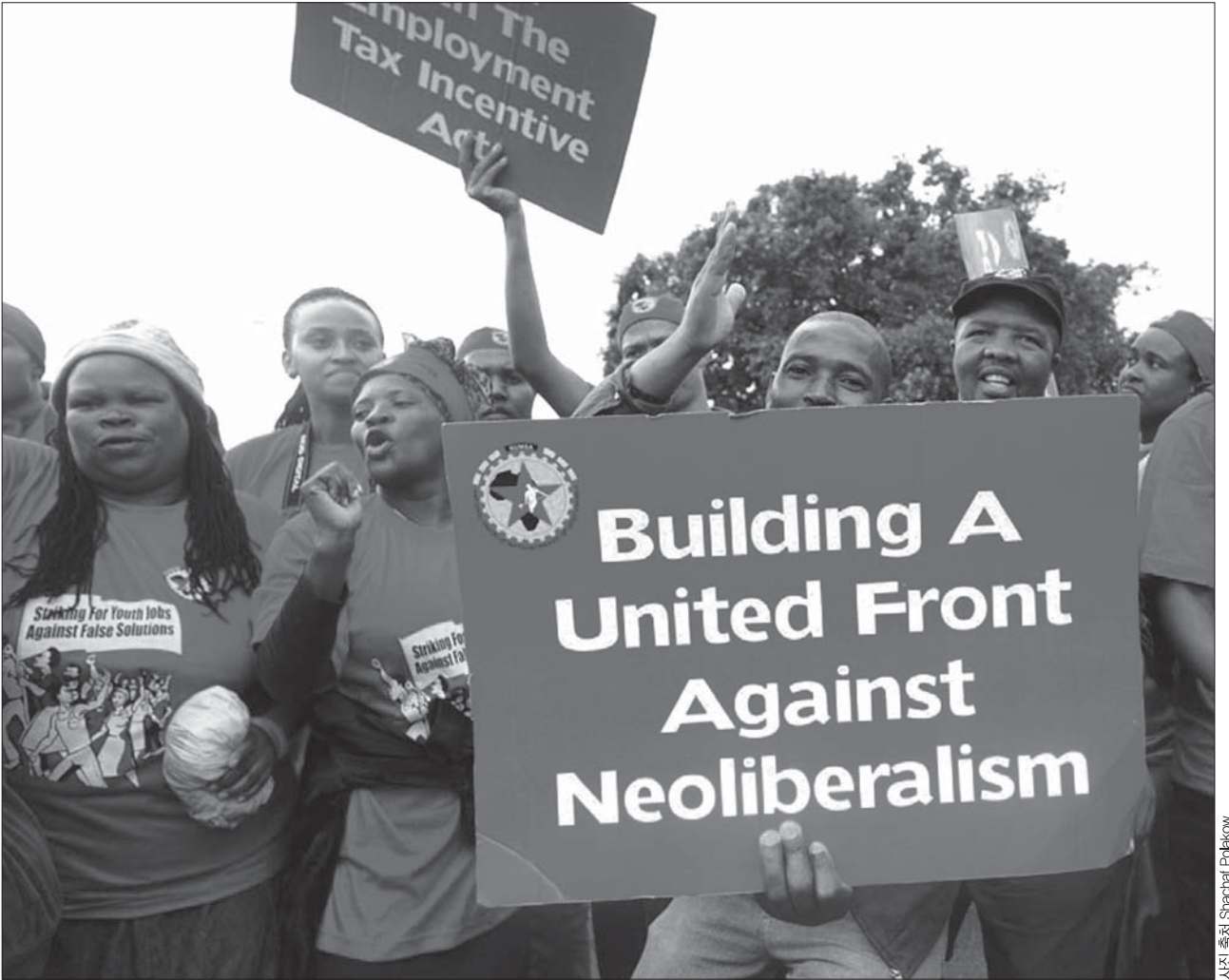


사진 출처: Shachal Podkow

새 노동자 정당 건설 운동을 벌이고 있는 남아공 노동자들.

2012년 마리카나 광원 2만 3천 명이 벌인 비공인 파업은 이런 투쟁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남아공 경찰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총을 쏘 34명을 살해했다. '마리카나 학살'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와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던 학살이, 그것도 흑인 정부가 흑인 노동자들을 학살한 것은 크나큰 충격이었다.

마리카나 파업은 결국 승리했고, 2014년 백금 광산 노동자 8만 명이 다섯 달 동안 벌인 전면 파업, 금속 노동자 22만 명의 전면 파업으로 이어졌다.

당시 코사투 사무총장 즈웰린지마 바비는 "약탈적 엘리트"라는 말까지 쓰며 ANC 정부를 공공연하게 비판했다. 그러므로 바비가 코사투에서 제명된 일은 단지 코사투의 지도권을 둘러싼 것이 아니었다.

또, 같은 맥락에서 금속노조는 2013년 12월 대의원대회에서 ANC 지지를 철회했고, 2014년 5월에는 새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금속노조가 2014년에 코사투에서 제명된 이유이다. 코사투 지도자들은 기층 노동자들의 이익과 염원을 대변하기보다는 ANC-공산당과의

동맹을 더 중시한 것이다. 게다가 금속노조 제명은 '단결'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강요하면 오히려 더 큰 분열을 부를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물론 새 노총이 기존 노조와 다투는 것에만 골몰한다면, 좌파적 대안이자 노동운동의 전진으로 비치기는 힘들 것이고, 심지어는 폭력 사태 같은 일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건은 새 노총이 기층의 투쟁을 지원하고, 코사투 산하 노조들을 압박해 투쟁에 나서게 하고, 남아공 노동인구의 대다수인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다.

혁명가들은 ANC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준비해야

ANC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정치 영역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그동안 ANC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왔는데, 최근 8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최초로 60퍼센트선 밑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ANC는 주요 지역에서 패배했다. ANC는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를 포함한 지역과 벨스 만델라 만에 있는 포트엘리자베스에서 백인 기반의 우파적 야당 민주동맹(DA)에 뒤졌다. 경제 중심지이자 남아공 최대 도시인 요하네스버그에서는 1위를 했지만 44.5퍼센트 득표에 그쳐 단독으로는 정부를 꾸릴 수 없게 됐다.

ANC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파적 야당인 민주동맹이 수혜를 입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상대적 좌파인 경제자유투사당(EFF)이 급성장해 왔다. 경제자유투사당은 창당 1년도 채 안 돼 실시된 2014년 5월 총선에서 1백만 표 이상을 득표해 국회의원 25명을 확보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이 8.25퍼센트로

약간 줄었지만 3위에 올랐고, 주요 지역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아공에서 새 노총의 출범은 ANC와는 다른 좌파적 대안을 건설하는 데서 커다란 일보 전진이 될 수 있다.

또, 금속노조 사무총장 어빈 짐이 러시아 혁명이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인용하며 "민주적이고, 노동자가 통제하고, 혁명적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진정한 사회주의 정당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은 (그의 마르크스주의가 혼란스러운 것일지언정)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정치를 주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물론 ANC와 코사투의 인기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투쟁의 정치적 계승자로 여겨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들을 금방 대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오산일 것이다.

더욱이 새 정당을 출범시키는 것은 ANC가 아닌 진정한 정치적 대안을 준비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ANC를 대체할 정당의 정치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남아공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투쟁의 결과로 집권한 세력이 ANC가 된 것은 당시 혁명적인 경쟁 좌파가 취약했기 때문이지, 결코 불가피했던 일이 아니었다.

1980년대에 투사와 혁명가들은 '노동자주의'(연성 신디컬리즘, 즉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갇혀 ANC의 민중주의 정치를 추수하거나 대결을 회피했다. 그 덕분에 권력 문제가 제기되자 ANC가 빠르게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ANC는 코사투 창설 당시 노조 내에서 소수파였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ANC-공산당-코사투 삼각동맹의 장악력이 날로 느슨해지는 기회를 이용해 진정으로 혁명적인 정치 조직의 뿌리를 내리려고 해야 한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3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5만 원 이상 ()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진축 정책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모아 탄생한 포데모스 2014년 3월 진축 반대 시위.

스페인 포데모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민중주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김종환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선거를 치렀지만 정부 구성에 거듭 실패했다. 이런 진통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7년 프랑코 독재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된 국민당(PP)과 사회당(PSOE)의 양당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런 양당 체제를 무너뜨린 주역은 바로 새로운 좌파 정당 포데모스다. 포데모스는 '78년 체제'(독재 종

식 이후 1978년에 새 헌법이 발표됐다)를 '전복'할 새 정치가 필요하다는 2014년 창당했다. 총선 첫 무대인 지난해 12월 사회당과 근소한 차이로 제3당(21퍼센트 득표)이 되면서 양당 체제를 무너뜨렸고, 올해 6월 다시 치른 총선에서도 이런 추세는 유지됐다.

우파와 중도계 정당들만이 활개치는 한국에서 봤을 때, 좌파 정당인 포데모스가 빠르게 파고들면서 공식 정치의 판세를 바꾸고 있는 것은 실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 성장의 배경

포데모스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서 중요한 발판이 된 것은 2011년 터져나온 인디그나도스('분노한 사람들'이라는 뜻) 운동이다. 경제 위기 이후의 진축 정책과 부패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이 광장 점거 운동은 독재 종식 이래 최대 규모의 항의 운동이었다. 거대한 운동의 부상은 대중의 급진화를 낳았다.

그러나 항의 운동과 함께 많은 총파업이 벌어진 그리스와 달리 스페인은 조직 노동자 운동이 인디그나도스 운동으로 대표된 거리 항의 운동만큼 강력하지 못했다. 더욱이 노조 지도자들이 사회당과의 협조 관계에 연연하며 저지른 배신적 타협 때문에 조직 노동자 운동에 대한 실망감도 자랐다.

기성 좌파도 무능했다. 스페인에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연합(IU)이 있었지만, 이들은 차악론을 내세우며 여러 차례 사회당을 무비판적으로 지

지했고, 진축을 자행하는 지방정부에 참여했고, 심지어 부패에도 연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새로 급진화한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포데모스는 인디그나도스 운동의 중요한 약점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며 등장했다. 인디그나도스 운동은 '반(反)정치'를 표방하며 기성 정당뿐 아니라 좌파 정치단체가 참여하는 것까지 거부했다. 그러나 국가의 탄압 위협 앞에 운동이 점차 작아지자, 수많은 사람들은 운동의 놀라운 위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취한 것은 적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포데모스는 인디그나도스 운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런 분노를 이제 운동이 아니라 정당의 형태로 버려야 한다고 사람들을 결집시켰다. 그런데 이때 포데모스가 제공한 정치는 바로 민중주의(좌파적 포퓰리즘)였다.

2. 포데모스 민중주의의 구체적 형태

포데모스 지도부는 오늘날 스페인 정치가 사실상 과두제가 됐기 때문에, 소수의 '카스트'(기득권층을 전근대 신분제 사회의 상층 계급에 비유한 것)에 맞서 전 민중이 계급을 초월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 이상의 것으로, 나름의 정치철학과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당 대표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와 주요 이론가이자 핵심 측근인 이니고 에레혼 등 포데모스 지도자들은 포스트마르크스주의자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샬탈 무프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의 전략》(초판 1985년, 재판 2014년)에서 제시한 좌파적 민중주의를 포데모스의 정치철학이라고 아주 빈번하게 강조한다.

라클라우와 무프는 사회 변화의 주체로 노동계급을 강조하는 것을 "경제주의"라고 매도한다. 현대 노동계급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사람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계급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단결은 무망하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노동계급에 천착하는 것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노동계급이 저절로 단결할 것이라는 착각("경제 결정론")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라클라우와 무프가 제시하는 대안은 언어와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계급을 초월해서 최대한 많은 대중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의 기초인) 물질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해롭고, 담론을 둘러싼 투쟁이 핵



포데모스의 지도자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담론 전략으로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체제 안에서 주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프는 "우리[가] ...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할 민주적 제도들에 대해 신뢰해야 할 것"(*《진보평론》* 68호)이라고 강조한다. *《헤게모니와 사회주의의 전략》*이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전략을 "급진적 민주주의" 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런 개혁주의로 후퇴 때문이다.**

민중주의

대학교수들인 포데모스 지도자들의 행보는 이런 이론에 따라 나름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이다. 단적인 사례로, 많은 좌파가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포데모스 지도부는 선거

승리를 노골적으로 강조하는데, 이는 몇몇 개인의 야심 때문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기습공격 전략"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한다. TV 토크쇼와 같은 미디어와 카리스마를 갖춘 스타 지도자의 구실도 이런 전력(戰力)의 핵심 담론 수단으로 중시된다.

이글레시아스는 "노동계급을 강조하는 담론은 대중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투쟁을 패배로 이끌고, 결국 지배자들만 이롭게 한다"고 냉소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데모스를 좌파 정당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포데모스 지도부는 좌파라는 성격 규정과 거리를 두며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좌·우를 넘어"는 앤서니 기든스 류의 제3의 길 이론가들이 좋아한 말이었다.)

3. 포데모스의 약점들

2014년 창당 이후 포데모스가 선거 때마다 보여 준 결과는 분명 놀랍고 고무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총선 결과는 애초의 기대(사회당을 제친 제2당으로 등극)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놓고서 당 내에서 많은 문제의식이 있다. 이글레시아스와 에레혼 사이에 노선을 둘러싼 갈등설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만일 연말에 한 번 더 총선을 실시하게 된다면 그런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그렇수록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점과 함께 약점을 잘 분석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포데모스가 보이는 약점은 주로 선거를 의식하는 지도부의 민중주의 정치에서 비롯한다.

첫째 약점은 메시지가 다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중의성(모호함)은 계급적 이해관계와 그 투쟁이 아니라 순전히 담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려다 보니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라클라우나 에레혼은 되레 이런 모호함이 포데모스의 강점이라고 주장한다. 집권하려면 단지 좌파적 대중만이 아니라 “중원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종의 ‘전략적 모호함’인 것이다.

그래서 포데모스는 창당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초창기의 불명료

한 메시지가 점차 명료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갈수록 불명료해져 왔다. 그것도 지지율이 오를수록 창당 때의 급진적 강령을 농치는 방향으로 말이다. 이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있다.

계급과 투쟁을 강조하기보다는 모호성에 기초한 담론 전략을 선택한 결과, 오히려 지지자들을 선거 정치 내의 풍향계에 내맡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포데모스와 말만 비슷하고 계급적 성격은 더 우경적인 시민당(시우다다노스)이 부상하자 한동안 포데모스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다. 지배적 상식에 타협하는 ‘담론’ 전략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영감을 불러넣기가 어려운 것이다.

둘째 약점은 평당원들이 스타 지도자들의 행보를 수동적으로 지지하는 것 이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투쟁 전략과 달리 담론 전략은 그것의 생산자가 압도적으로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위로부터의 전략이고, 전문적이어서 대중을 상당히 수동화시키기 십상이다.

지도부는 모호함 덕분에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꿀 수 있다. 예컨대, 창당 당시 나토 탈퇴까지 거론했지만 나토군 장성을 총선 후보로 세운 것, 사회당과 연정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한 지 한 달도 못 돼 연정의 조건(이글레시아스 부총리

임명)을 제시한 것 등이 그렇다. 이 과정에서 당내 민주적 의견 수렴은 생략됐다.

창당 당시에는 ‘서클’이라고 불리는 기층 모임 수백 개가 주목을 받았지만 지도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서클을 주변으로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당내 좌파 활동가들과의 충돌도 불사했다.

셋째 약점이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 문제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권력은 선출된 공직에 있지 않고 선출되지 않은 대기업, 언론, 군대 등에 있다. 그리스 부채 문제에 대한 시리자 정부의 무기력은 국가를 통한 개혁을 중심에 두는 개혁주의 전략의 근본적 취약성을 보여 준다.

집권 후에는 물론이고 집권에 가까워지기만 해도 포데모스는 그리스 시리자가 부딪혔던 것보다 결코 작지 않은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포데모스 지도부의 대답은 ‘스페인인 그리스보다 경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그렇게까지 일방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거나 ‘시리자는 전통적 좌파에 가까운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바로 그렇게 때문에 시리자 정부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는다.)

부패한 우파의 아이콘

홍준표를 구속하고 소환해야 한다

오는 9월 26일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을 밀어붙이고 ‘성완중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를 도지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소환운동을 진행해 왔다.

홍준표는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경남 의석 중 3석을 잃어 사실상 심판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성완중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8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치명타를 입었다.

홍준표는 보궐선거로 경남 지사에 당선한 직후부터 우파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려고 부신했다. 그래서 우파의 대표적 의제인 반(反)노동, 반(反)복지 강성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바로 다음 날 홍준표는 강성 우파 정부의 등장에 힘입어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힘쓰고 있던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을 ‘강성노조’, ‘귀족노조’라는 우파의 코드명으로 공격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진보 진영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최초의 대중투쟁을 벌였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이 투쟁은 이후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맞선 파업 투쟁에 나서는 데 자신감을 줬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 추진을 잔뜩 버리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홍준표의 폐업 결정을 승인했다. 보수적인 법원도 최근 홍준표를 편들어 폐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경상남도의 처분 행위가 아니라는(그럼 누가 폐업을 했단 말인가!) 황당한 이유를 들며 말이다. 지난 8월 30일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와 달리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임원 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마찬가지로 폐업 처분을 취소하지

는 않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반(反)노동 강성 이미지 구축의 일환이었다면,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은 반(反)복지 강성 이미지 구축하기였다. 또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무상급식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기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것이었다.

홍준표는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다 ‘자살꿀’을 넣고 시장에서 물러난 오세훈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는 등교 거부 등 지역 내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부패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부패가 홍준표의 발목을 잡았다. 부패 기업가이자 정치인인 성완중한테서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것이다. 홍준표도 혐의를 발뺌했지만 법원은 실행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을 면하도록 특혜를 줬지만 말이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성완중 리스트’ 연루 등으로 도내 여론이 나빠지자, 우파 단체들과 홍준표의 지지자들은 박종호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으로 반격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남도민 19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서명부 조작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상남도 산하기관 직원들과 공무원 등 홍준표의 측근들은 구속돼 실행 등을 선고 받았고, 홍준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변명하다가 결국 사과하고 주민소환투표를 접어야 했다.

그럼에도 홍준표는 강성 우파 선두 주자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한반도 핵균형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라며 공공연히 핵무장을 주장했다.

홍준표의 실행 판결 후 경상남도의 진보 단체들은 그의 사죄와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기각하지 말고 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김재현

4. 지도부의 약점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이 지금처럼 “중원 장악”을 위해 갈지자 행보를 할 것이 아니라 좌파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운동을 건설하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포데모스의 급부상은 2011년에 대중 운동이 크게 분출한 것에 빚지고 있다. 반면, 2015년의 지지율 하락은 같은 기간 거리 시위와 노동자 파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중요한 건 운동이 아니라 선거’라고 사실상 말해 왔다.

그러나 분명한 주장과 실천을 통한 검증, 당원들의 능동적 기여가 뒷받침될 때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하면서도 진정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려면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운동을 건설하려면 진지한 토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일치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며칠 만에 당의 입장이 뒤집히고 당원들이 언론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상황은 그런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동시에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지도부의 민중주의적 전략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며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므로 이데올로기 투쟁

은 어느 순간에는 ‘물질적’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갖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대자본이(건축 정책을 강요하는) 유럽연합을 계속 편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중주의자들은 흔히 (낭만적으로) ‘위대한 민중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창의적으로 극복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회피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절로 그에 상응하는 전략이 생겨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상 요행을 명운을 겹쳤다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는 “사상도 투쟁하는 수많은 대중에게 채택되면 물질적 힘이 된다”고 했다. 그러려면, 그 무수한 대중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에 기반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물질적 이해관계와 힘을 가진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민중을 이루는 상이한 계급들이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좇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운동은 마비되기 십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대중 파업)를 휘두를 수도 없다. 그래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이 양보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보임으로써 빈민과 중간계급 등을 지도하며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데모스 지도자들이 오히

거나 왜곡하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의 정수가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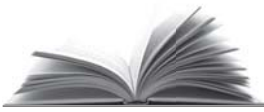
라클라우와 무프의 주장과 달리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을 중시하는 것은 경제 결정론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칼 마르크스 이래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선구자들은 자본주의가 저절로 노동계급의 단결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결은 사회주의적 정치로 정취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점을 강조해 이론과 전략, 전술로 발전시킨 것은 레닌이었다. 노동계급의 선진 부분이 혁명적 조직으로 따로 결집해 오랜 기간에 걸쳐 대중과 사회주의적 정치로 융합하는 법을 배우며 단련되고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포데모스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대중 운동으로 폭발하고 그 결과 대중이 급진화하면서 정치적 표현체를 찾는 과정에서 부상했다. 다른 나라의 좌파들이 포데모스의 높은 지지율만으로 그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 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그 지도부의 개혁주의 정치만으로 평가절하하고 등을 돌리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포데모스가 더 전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안하면서 그 지지자들을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와 조직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야 한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 홍준표.



서평 |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

새 세대 페미니즘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 주는 책

최미진

지난해부터 시작된 페미니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페미니즘 서적 출판과 판매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가 정식 출판사와 유명 서점 없이 개인들의 후원만으로 초판 5천 부를 찍고 그것이 5일 만에 동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책은 발간 한 달 만에 1만여 부가 판매됐다고 한다.

“성차별 토픽 일상회화 매뉴얼”을 표방하는 이 책이 유명 작가의 책이 아님에도 젊은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이유는 그 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그만큼 일상의 성차별에 대한 분노가 깊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20~30대 여성들은 이전 세대 여성들보다 비교적 평등하게 자라났고 평등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사회에 나가면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과 무시, 광범한 성적 비하가 난무한 현실을 맞닥뜨리며 분개하고 있다. 게다가 ‘오히려 역차별이 문제’라면서 페미니즘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일부 남성들의 주장은 많은 여성들의 부아를 더 치밀게 만든다.

사실, 이 책은 본격 대화에 들어간 후의 매뉴얼보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여성도 자신이 원치 않는 대화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는 앞부분에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을 동등한 대화 상대로 존중하지 않거나 ‘토론’의 탈을 쓰고서 성차별적 주장을 하는 상대에게 필자가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는지를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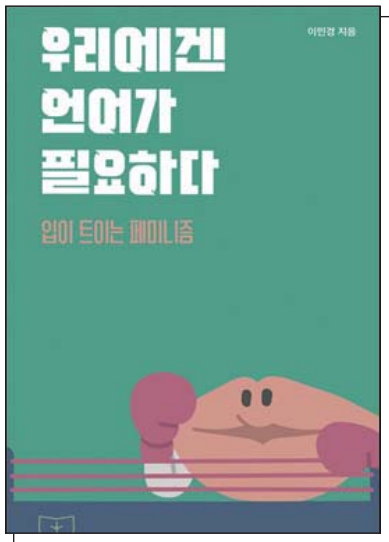
이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무시당한 경험이 한둘이겠는가. 따라서 여성의 ‘NO’는 ‘NO’이며, 성차별주의자들에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고 맞서 싸워도 된다는 용기를 북돋는 것이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많은 독자들이 공감과 통쾌함을 느끼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일 듯하다.

그런데 “한국 영 페미니스트의 정치적 감성”을 잘 보여 주는 책이라는 김현미 교수의 추천사가 말해주듯이 이 책에는 실전 지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여성혐오 사회’ 답론이나 메갈리아, 미러링 등 최근 페미니즘의 뜨거운 쟁점들을 다루고 있고, 책 전반에 걸쳐 여성 차별의 메커니즘과 그것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필자 나름의 방법론과 문제의식이 녹아 있다.

차별과 혐오

필자는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의 핵심 주장을 공유하는 듯하다. 즉, 광범한 여성 차별 현상을 모두 “여성 혐오”로 규정하면서, 여성 혐오는 공기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다양한 성차별 현상을 모두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

이민경 지음, 봄알람, 92쪽, 12,000원

‘여성 혐오’라고 호명하는 것 자체가 차별에 맞서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본다. 여기에는 “아주 작은 여성혐오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작은 성차별조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는 좋았다 할지라도, 혐오와 차별을 구분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여성혐오 사회”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가령, 필자는 여성의 말을 무시하는 것과 여성을 살해하는 것은 같은 “비탈”, 즉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여성차별적 사회라 할지라도, 모든 남성이 여성들에게 공포심을 느끼며 사회악으로 여긴다거나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 또한, 심한 여성비하적 표현을 단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끄적거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여성을 살해하는 사람은 더 극소수다. 그럼에도 이 모두를 본질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혐오’로 보고, 남성 모두가 잠재적 가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남성들을 차별 반대 운동 쪽으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밀어내는 효과를 내기 쉽다. 뒤에서도 더 다루겠지만, 이것은 여성차별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누구와 맞서 싸워야 하는지 하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그런데 필자는 여성 혐오 사회 답론이나 ‘모든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견해가 어떤 진영에서 나왔는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이런 주장이 결국 ‘여성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손쉽게 일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성해방에는 아무 관심 없는 경찰이나 ‘일베’ 따위가 강남역 살인 사건을 뭐라고 규정했는지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여성 차별 반대 운동의 올바른 전략을 위해 우리 운동 안에서 진지하게 토론돼야 할 문제다.

(메갈리아와 미러링에 대한 쟁점은 본지 웹사이트에 실린 이 기사의 전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정치학’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이것은 오늘날 새 세대 페미니즘 지지자들이 정서적으로 강력히 이끄라는 경향인 듯하다.) 즉, 여성 차별 문제를 다룰 때 그 출발점과 종착점을 모두 개인들에게서 찾는다.

필자는 자기 주장의 근거로 여성 개인의 경험과 직관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듯하다. 차별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에서도 (사회구조를 잠시 언급하긴 하지만) 결국 개개인들의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 가령, 차별에 의식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차별적인 기존 사회구조에 한 명분의 힘을 싣는다”고 본다거나 “개개인의 여성혐오는 사회 전반의 여성혐오를 공고히 하는 양분”이라는 주장은 사회를 개인의 행위의 합으로 보는 관점을 시사한다. 그래서 결국 모든 개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의 토대를 키웠거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인 양 가해에 일조한 채로 살아왔거나, 적극적으로 가해했거나, 셋 중 하나”로 분류된다. 차별의 근원이나 그것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에서 자본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국가 기구 등 사회구조가 하는 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개인의 정치학

문제의 해결책도 개인들에게 맞춰져 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남성과 맞서 싸우는 것을 중시하며, 개인이 받은 차별의 경험을 말하는 것 자체를 주된 실천이자 변화의 동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이 개인들과의 논쟁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 있어 보인다.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차별을 개개인의 미시적 관계로 축소(환원)하지 않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개인들이 어떤 구실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주목한다.

이런 관점은 개인의 경험이나 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구조가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기계적 유물론과는 다르다. 개인들의 차별 경험이나 그로 인해 생기는 직관을 무시해선 안 된다. 특히, 차별을 직접 겪어 보지 않은 남성들이 여성 차별의 경험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드는 태도는 사절이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이 곧 온전한 진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험상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진실은 반대이듯이 말이다. 또한, 개인들의 경험과 의식은 매우 불균등할 뿐 아니라 삶과 투쟁의 경험을 통해 변화하기 때문에 각자가 특정 시기에 가진 경험이 곧 사회 전체의 구조와 형상을 고스란히 축소한 것이 될 수 없다.

차별에 동참 또는 침묵하거나, 차별적인 현실에 무지한 개인들이 차별의 유지에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차별은 개인을 매개로 나타나고, 상당수 노동자들도 차별에 동참 또는 방관한다는 점을 마르

크스주의자들은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을 유지하는 데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차별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남녀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경제력과 강제력을 행사해 체계적으로 차별을 부추기는 진정한 권력자들(세계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국가)과 그런 이해관계와 권력이 전혀 없는 남성 노동자 개인들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남성 노동자들이 차별을 직접 경험하지 않거나 차별에 적극 맞서 싸우지 않는다 해서 곧 그 차별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객관적 이해관계에 걸맞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지키려면 동료들과 함께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투쟁해야만 한다. 노동자 계급은 그 안의 차별을 용인하면 할수록 전체의 조건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유리한 독특한 피착취 집단이다. 노동자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 없이 말이다.

이것은 개인들의 차별적 태도가 차별적인 사회 구조의 토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라는 점을 보여 준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사회변혁 활동가들은 이런 일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노동자연대가 신문을 발행하고 다양한 규모의 토론 모임을 꾸준히 개최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들의 의식적인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전히 개개인들이 각자의 식을 깨우치려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우리는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여성 차별이 유지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강력한 장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개인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이지만, 사회 변화는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존재하고 실천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뭉쳐 조직을 만들고, 특히 자본주의의 심장인 이윤을 생산하는 노동자 계급의 집단적 투쟁을 해야만 그 속에서 변화의 핵심 동력이 나온다고 본다.

여성의 ‘NO’가 ‘NO’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차별을 용납하지 않고자 하는 여성들이 개인의 정치학에서 더 나아가 사회구조를 바꾸는 계급 정치학의 대열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체제에 깊이 뿌리 박힌 여성 차별에 맞서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투쟁할 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이 기사의 전문을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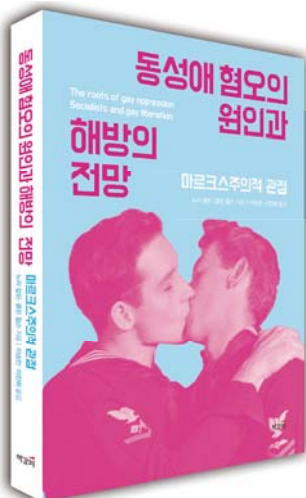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주디스 오어 지음 | 이장원 옮김 | 440쪽 | 16,000원

인류의 절반인 여성은 왜 아직도 차별받을까?
여성해방은 어떻게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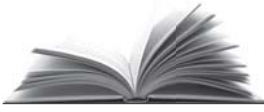
인류의 절반인 여성은 왜 아직도 차별받을까? 왜 여성은 유리 천장을 뚫고 부와 권력을 누리기는커녕 저임금의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여성운동이 거둔 성과가 공격받고 있을까? 여성해방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책은 여성운동의 성과와 후퇴, 새로 등장한 문제와 모순을 검토하고 여성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전략을 내놓는다.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노라 칼린·콜린 윌슨 공저 | 이승민·이진화 공역
208쪽 | 10,000원

<http://chaekgalpi.com> 책갈피



서평 | 《중국 혁명의 비극》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에 관한 최상의 책



중국 혁명의 비극

해럴드 로버트 아이작 지음,
정원섭·김명환 옮김,
숨쉬는책공장, 688쪽,
19,500원

이재권

숨어 있던 중국 근대사 고전이 최근에 출간됐다. 《중국 혁명의 비극》은 미국 언론인이자 정치학자였던 해럴드 로버트 아이작(1910~1986)이 1930년부터 5년간 중국 현지를 취재하고서 1938년에 펴낸 《중국 혁명의 비극》 초판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가 손수 소개 글을 써 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을 이토록 꼼꼼히 조사해 집필한 책은 한국에 아주 드물다. 그나마 왕판시(왕범서)의 《회상: 나의 중국혁명》(새물결, 2003)이 나와 있을 뿐이다.

중국 혁명이라 하면 흔히들 1949년 중국공산당이 집권한 민족주의 혁명을 떠올리는데, 그로부터 2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이미 노동자 혁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가치가 높다. 1925년 이전 중국 사회의 실상과 1917년 러시아 혁명, 코민테른 설립과 타락 등 세계사적 사건들을 분석하며 노동자 혁명의 맥락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중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터져 나오는 오늘날, 중국 노동자 혁명을 되새겨 보는 일은 ‘옛 중국 같은 동아시아 후진국에서도 노동자 혁명이 벌어졌다고?’, ‘사회주의는 어떻게 가능하지?’, ‘현 중국이야말로 바뀔 수 있는 걸까?’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것이다.

노동자 혁명의 전야

《중국 혁명의 비극》은 1911년 신해혁명(쑨원 주도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움) 등 20세기 초에 나타난 중국의 변화뿐 아니라, 19세기 중국의 풍경까지 매우 세세하게 다룬다.

당시 중국(청나라)은 “현대적 증기선”과 “원시적 뚝단배”가 공존하며 “대비와 모순이 늘고” 있었다. 애초에 중국 사회는 “생산력 정체”가 빛은 “경제의 후진성” 탓에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발전하지 못했”고, “농촌에서는 봉건적 착취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다 “서구 자본주의 팽창의 물결”이 들이닥쳐 중국은 “자본주의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1842년과 1858년 아편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중국의 고립은 끝났”다. 이에 따라 “19세기 말에는 외국 기업이 중국 경제의 모든 주요 지위를 차지”했고, “새로운 계급”인 “매판계급이 등장”했다.

제1차세계대전 중에는 “전쟁 수요 덕분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중국이 눈부신 공업 성장을 이뤘”다. 자연스레 새로운 노동자 계급이 형성됐고, 이들이 훗날 “외국인 고용주는 물론이고 중국인 고용주와도 격돌”하게 된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과 조선 3·1 운동의 여진으로 1919년 5월 4일 베이징 대학의 구성원들이 앞장서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다(5·4 운동). 이 운동은 수만 명이 참가한 파업으로 번져 “전국을 휩쓸었”다. 이렇듯 중국 사회는 열강과 구습에 맞서 새로운 분위기가 들끓던 중이었다.



1925년 홍콩 총파업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1925~27년 중국 노동자들이 보여 준 혁명적 잠재력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준다.

저자 해럴드 아이작은 ‘중국 혁명의 문제’를 다루며 “세계경제의 현 상황에서 일국적 과제는 세계적 과제와 분리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중국 농촌 경제의 특징과 함께 중국 노동자 혁명에 큰 영향을 준 1917년 러시아 혁명, 낙후한 식민지의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연속혁명, 볼셰비키 같은 혁명정당의 지도 등을 제시하며, “중국 혁명은 제국주의에 치명적 일격을 가하고 소비에트의 국가적 고립을 깨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부르짖는다. 1927년 중국 산업 노동자가 2백50만 명, 수공업 노동자가 1천1백만 명 이상 있었다고 밝히며, 1905년 러시아 상황과 비교해 수치나 전투성 면에서 “현저한 유사성”을 보였다는 부분도 무척 흥미롭다.

파업과 봉기, 그리고 “비극”

1919년 이후 맹아적 노동자 계급 정치조직이 등장해 일부는 사회주의 단체로 성장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불빛 속”에서 1920년 드디어 중국공산당이 설립됐다. 5·4 운동의 주동자 천두슈가 창당을 이끌었다.

중국공산당이 맞닥뜨린 첫 번째 문제는 노동계급 정당으로서 “부르주아 민족주의 국민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였다. 공산당은 “민족주의 혁명운동이 가진 명백한 진보적 성격” 때문에 참가를 결정했다. 1921년 코민테른 2차 대회에서 레닌이 민족해방운동을 다루며, “유아적 단계에서조차 독립성 보존을 가장 중요한 전제로 노동자 계급 조직이 민족주의 운동과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듯이 말이다. “공산당원들은 이미 국민당에 가입해 있는 남부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획득하고 싶어 개별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독자적 전망은 당시 고려 사항에서 점차 제외됐다. 1923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노동계급이 완전한 독

자 세력으로 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공산당원들은 “사실상 ‘절대적 독립세력’을 대표해 활동한다는 개념을 포기”했고, 이윽고 “1923년 6월 중국공산당 3차 대회는 “모든 활동을 국민당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입당 반대 목소리를 내리눌렀다.

“국민당·소련·공산당의 협력” 등을 담은 새로운 강령이 1924년 1월 국민당 1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통과했다. “레닌이 바로 이 대회 개막일에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우연이자 역설이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대중운동이 성장했다. 중국 공장 노동자들이 조직된 노동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1920년 광저우 기계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나섰다. 1922년 홍콩 선원들이 파업을 거쳐 노조를 인정받고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이후에도 파업은 계속됐다. 1923년 베이징·한커우의 철도 노동자들이 대파업을 벌였고, 상하이 노동자 4만 명이 24개 노조로 조직돼 파업을 이어 갔다. 그야말로 전국이 뒤흔들렸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국민당·공산당 연합의 요구” 때문에 질식당할 위험에 놓인다. ‘국공합작’은 공산당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계급투쟁에 자기 제약을 가했다. 그래서 1926년 3월, 장제스가 광둥에서 첫 쿠데타를 일으켜 현지 공산당 지도자와 파업위원회 활동가들을 투옥하자 곧바로 트로츠키와 천두슈 등은 공산당이 국민당에서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 투쟁은 줄기차게 확산됐다. 1925년 상하이 조차지에서 경찰이 발포해 파업 시위대 10명이 죽은 5·30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파업 운동과 영국 배척 운동이 전국에서 펼쳐진다. 특히 광저우와 홍콩 등에서는 이중 권력의 맹아인 광저우노동자대표자회의가 구성

됐다. 노동자들이 광둥성을 직접 통제한 것이다.

1927년 3월 상하이에서 노동자 80만 명이 총파업과 무장 봉기를 일으켜 군벌을 물리치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4월 12일, 반혁명을 주도하던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무장 해제당한 공산당원과 투사들을 복벌 중인 장제스 군대가 대량 학살한다. “비극”의 장막이 걷힌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 혁명은 처참히 파괴됐다.

역사의 교훈

이런 오류와 배신 뒤에 공산당은 모험주의적·초좌파주의적 폭동을 이어 갔지만 큰 희생만 남기고 실패했다. 장제스의 공세에 직면한 공산당은 농민 게릴라 투쟁에 몰두하다가 결국 1934년 대장정이라는 험난한 도피 작전을 개시한다.

혁명 운동이 한창일 때 트로츠키는 노동자위원회[소비에트]를 건설해 혁명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명 잠재력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혁명가들은 국민당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조직하지 못했다. 중국에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소수였다. 오히려 중국공산당의 스탈린주의 지도부는 혁명 패배가 낳은 재앙을 천두슈 탓으로 몰고 갔다.

《중국 혁명의 비극》은 이런 내용을 방대하게 풀어 쓴 대작이지만, 읽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와 통쾌함과 쓰라림이 가득한 책이다.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혁명가들의 독자적 조직과 지도 없이는 지배계급이 혁명을 잔인하게 진압하리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끈기있게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구든 공감하리라 본다. 저자 해럴드 아이작이 책 앞머리에 남긴 감동 어린 문구로 서평을 마칠겠다. “중국 혁명으로 죽어 간 영웅들과 살아남은 투사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공공·금융 노동자 비난 신화를 논박한다

김문성

금융노조 파업을 사흘 앞둔 9월 20일 노동부장관 이기권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볼모로 하는 공공·금융 총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기권은 임금체계 개편이 “법으로 의무화됐다”는 억지까지 부렸다. ‘불법 파업’이라는 암시를 주고 싶어서였을 텐데, 그가 기자회견에서 내민 근거는 법 조항(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법 제정 당시 ‘속기록’이다.

장관이 거짓말하고 억지 부리는 건 불법이 아닌가. 사실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신분을 속인 일이 들끓나고도 경찰청장이 되는 정권에서 그게 뭐 큰 일이겠는가.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등 표 받기 좋은 본인의 대선 공약을 모두 폐기 처분해 놓고도, 배신의 정치는 극도로 싫어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에게 배신당한 국민에게 배신 정치인을 심판해 달라고 불법으로 선거 개입하는 박근혜가 임명한 장관다운 짓이다.

게다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가 안 되면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하라고 공식 재촉한 당사자가 이기권 본인이다. 이 결정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너무 명백해 불법 논란을 자초했고 죄다 소송에 걸려 있다. 특단의 계급적 판결이 아니라면 정부가 패하기 십상인데, 문제는 그런 불법

이 노동자들의 파업 열기를 더 높였으니 파업을 조장한 책임을 묻겠다면 이기권 본인을 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기권이 대표로 말했지만, 금융·공공기관의 파업에 대해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하나같이 고임금 노동자들이 웬 파업이라고 부르짖는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사들이나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듯, 기업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사주들은 별 책임도 지지 않는다. 대기업 이윤의 일부인 사내유보금만 해도 수백조 원에 이른다. 자본주의와 기업주들이 불러 온 경제 위기에 애먼 노동자들의 임금을 문제 삼으며 책임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은 억지일 뿐이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70퍼센트가 금융·공공기관의 부실 원인은 정부 탓이라고 답했다. 성과연봉제를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63퍼센트, 성과연봉제는 공익성과 불합치한다, 사회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답변이 둘 다 66퍼센트였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은 통하지 않았듯이, 이 정권의 거짓부렁이 잘 막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연대도 소중하다. 이기권과 기성 언론들의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을 해 왔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의 성과주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다”며 파업을 지지하고 이기권을 정면 반박했다.

공공부문은 위기에 같이 책임져야 한다?

도둑질한 돈도 아니고 사용자인 정부도 동의해서 책정한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액을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경제 위기 시대에 정부와 사용자들의 태세 전환을 잘 보여 준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임금 삭감으로 재정지출을 줄이고, 이를 지렛대로 민간 부문 임금 삭감으로 나아가려는 속셈일 뿐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모두 높은 것도 아니고, 고용이 철밥통인 것도 아니다.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 등 시장주의 논리가 보급돼 온 지 오래고, 또 임금과 복지 향상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압박으로 크게 제약돼 왔다.

특히, 총액인건비 제도 같은 임금 통제 정책 때문에 공공부문이야말로 임금 억제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허울만 좋은 무기계약직 양산의 주범이 돼 왔다. 인건비 총액을 제한해 놓고 정규직 임금이 오르는 게 문제라는 건 이자를 50퍼센트씩 받아먹으면서 왜 남의 돈 쓰고 안 갚냐는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 없는 억지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이런 압박을 더 전면화해 왔다. 지난해에도 멸절하게 정년이 있는 노동자들의 말년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했다.

최근 서울의 지하철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로나, 경주 지진 발생일에 철로 수리 작업을 하다 사고로 죽은 노동자들이 모두 공공부문의 저임금 하청 노동자인 것은 단지 우연일까.

이런 비극을 봐도 공공부문에 충분한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돼야 한다. 대체로 필수적인 공익 서비스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고,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 숙련도를 높이고,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다수에게 유리한 일이다. 이렇게 되려면 오히려 정부가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 노동계급 관점의 효율성이란 이런 것이다.



사진: 이매진

히스테리 공공·금융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온갖 비난은 악의적 왜곡과 책임전가로 가득차 있다.

금융 고임금이 문제?

최근 금융 산별노조의 입단협 교섭을 파탄 낸 은행권 사용자들도 ‘예대마진’이 줄어드는 등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성과연봉제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줄어드는 것은 건설 등 위축된 기업들의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탓이 더 크다. 그나마도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신속히 낮춰서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다. 게다가 대출금리도 낮춰 가계 대출 영업을 여전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대마진 수익이 줄었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임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폭등 등으로

평범한 노동자들조차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이 느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2년 전과 비교해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수익이 2조 원 넘게 줄긴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3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최근 실적 하락 공포는 부실 기업들로 인한 총당금 부담이 늘어난 탓이 크다. 역시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여기에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들도 해당된다. 도대체 이 은행들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에서 대우조선의 부실과 분식회계

를 알고도 계속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까지 폭로된 상황에서 말이다.

오히려 그동안 은행권이 한때 10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때조차도 그중 상당수는 주주들에게 고배당으로 지급한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그런 수익을 위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 탓을 하지 말고, 주주 배당을 줄여야 마땅하다.

자본주의적 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금은 노동력 사용권에 대한 대가(노동력의 생산비)이므로 임금 노동자가(경영권·인사권의 이름으로 그 노동력을 이미 배치·사용한 결과로 얻게 된) 경영 실적에 책임질 아무 이유가 없다.

안보 위기에 웬 파업?

보수 언론은 북한 핵실험 등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에서 웬 파업이냐는 비난도 한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 사안을 끌어와 노동자 파업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보자는 식이다. 김일성이 죽었는데 웬 파업?(1994년) 가 묻에 웬 파업?(2001년) 식이다. ‘파업은 무조건 안 된다’는 계급 본능적 히스테리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악화되고 있는 안보 위기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강대국들 간의 동아시아 패권 다툼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미국이 한미일 간 군사동맹

을 강화하려 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지렛대로 북한 악마화와 대북 압박을 활용한 것이 더 직접적인 배경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등 중국을 포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확실히 줄을 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야말로 수동적 피해자 이기는커녕 한반도 주변의 안보 위기의 한 연쇄고리인 셈이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노동자가 파업을 자제하고 임금을 삭감하면 해결되는가? 외부의 적에 맞선 국민적 단합을 위해 내부 갈등을 피해야 할 때라면, 왜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관철하려고 지금 이 난리인가? 박근혜 식 관점이면 이 정부와 기업주들이야말로 국가적 국론 분열, 갈등 조장의 주범 아닌가?

진실인즉슨,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은 경제·안보·정치 위기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 지배자들이 적으로 보는 국내외 모든 상대에게 호전성을 발휘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단단하게 파업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획득하는 길이다.